

최근 가계부채 급증현상과
정책과제

2003. 1

본 자료는 금융·재정연구센터 이인실 선임연구위원
과 거시경제연구센터 배상근 연구위원, 김창배 선임
연구원이 공동으로 집필한 것으로, 본원의 공식견해와
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문의: ☎ 3771-0020/0023/0017 Fax 785-0273

<제 목 차 례>

【요 약】	V
I. 서론	1
II. 가계부채 현황	4
1. 가계부문의 금융부채 현황	4
2. 금융권별 가계부채 현황	6
3. 가구별·연령별 가계대출의 구성 현황	10
4. 가계대출 연체율과 신용불량자 현황	13
III.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	16
1. 내수위주의 경기부양정책	16
2. 확장적 통화정책의 지속	20
3. 소매금융시장의 급팽창과 경쟁심화	22
4. 정부의 카드사용 장려정책과 소액신용대출 관련 규제완화	25
5. 부동산가격 등 자산가격 상승	27
6. 기업들의 투자 자금수요 감소	28
IV. 정부의 정책대응과 금융권 부실화 가능성	31
1. 가계대출급증 억제정책	31
1) 가계대출의 신용리스크관리 강화	31
2)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상향조정	32
3)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건전성감독 강화	33
4) 신용카드부문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34
5) 가계대출 이용자 보호대책	37

2. 거시경제정책의 문제점	38
1) 투자여건 개선 없는 저금리 정책	38
2) 과잉유동성 흡수노력 부족	39
3) 정책혼선과 시장기대 형성 왜곡	40
4) 최근 정부의 금리정책 전환	43
3. 가계대출정책의 문제점	44
1) 은행권의 여유자금 운용의 어려움	44
2) 가계대출 억제정책의 부작용	45
3) 부적절한 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48
4) 신용관리에 대한 사회적 적응체제 부족	49
5) 가계부채의 만기구조 취약	49
4. 금융권 부실화 가능성	50
1) 은행권	51
2) 비은행권	52
3) 가계대출 금융회사	53
4) 카드회사 부실	54
V. 가계대출억제 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	56
1. 정책 시나리오	56
1) 기본 시나리오(Base)의 가정	56
2) 시나리오1(Sim1)의 가정	56
3) 시나리오2(Sim2)의 가정	57
4) 시나리오3(Sim3)의 가정	57
2. 정책 시나리오별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58
3. 정책적 시사점	59
VI. 향후 정책방향 및 정책대응	61
1. 장기분할식 대출 전환	61
2. 시장친화적 감독정책	61

3. 가계대출관련 법규 및 제도 정비	62
4. 가계부문의 교육 및 홍보 강화	63
5. 자본시장의 대기성 자금을 주택금융시장으로 유도	64
6. 거시경제정책의 공조회복 및 과잉유동성 흡수	65
7. 금융시장 환경 개선	66

<표차례>

<표 II-1 > 개인부문의 금융자산 및 부채 증가 추이	4
<표 II-2> 국내총생산 및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금융부채비율의 국제 비교 ..	5
<표 II-3> 가계신용 잔액 추이	6
<표 II-4> 금융권역별 가계신용 증감 추이	8
<표 II-5> 금융권의 대 민간 원화대출에 대한 가계대출 비중 추이 ..	9
<표 II-6> 금융권별 개인대출 취급비중 현황	9
<표 II-7> 금융권별 차입자 수 및 평균 차입액	11
<표 II-8> 각 연령대별 차입자 현황	11
<표 II-9> 각 금융권의 연령대별 대출비중	12
<표 II-10>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	13
<표 II-11> 은행권 가계대출의 증가 추이 및 주택담보대출 비중	14
<표 II-12> 개인신용불량자의 연령별 및 금액별 현황	15
<표 III-1> 가계소비와 국민총소득 증감률 추이	16
<표 III-2> 총저축률과 부문별 저축률 추이	18
<표 III-3> 가계소비지출의 수입품의 의존도 추이	19
<표 III-4> 내수용소비재 출하 및 소비재 수입 추이	19
<표 III-5> 가계의 해외소비지출 추이	19
<표 III-6> 가구주 연령별 소득, 소비지출 증감률 추이	20
<표 III-7> 주요 통화지표 증가율 추이	22
<표 III-8> 가계대출의 용도별 구성비	27

<표 III-9> 아파트 매매가격 추이	28
<표 III-10> 기업의 자금운용 및 조달 구조	29
<표 III-11> 상장 제조업체 재무구조 관련비율 추이	30
<표 III-12> 장·단기차입금 구성비 추이	30
<표 IV-1> 금융회사별 대손충당금에 대한 최저 적립률 변화	32
<표 IV-2> 적기시정조치기준 강화안	36
<표 IV-3> 카드회사의 대환대출 및 연체율 현황	37
<표 IV-4> 2002년 정책금리변화와 통화 및 통화안정증권발행 증가율 추이·	39
<표 IV-5> 한국은행의 주요 정책신호 일지(2002년)	41
<표 IV-6> 정부의 주요 정책신호 일지	42
<표 IV-7> 예금은행의 자산별 비중 추이(말잔기준)	45
<표 IV-8> 카드회사의 현금대출 업무비중 및 금액 추이	47
<표 IV-9> 금융회사1)의 여신건전성 현황	51
<표 IV-10> 은행권의 여신건전성 현황	52
<표 IV-11> 비은행권의 여신건전성 현황	53
<표 IV-12> 서민금융회사의 여신건전성 현황	53
<표 IV-13> 기타 비은행기관의 여신건전성 현황	54
<표 IV-14> 신용카드회사 현황	55
<표 V-1> 가계대출규모 변화의 거시경제적 효과	59

<그림차례>

<그림 III-1> 가계소비 및 GNI 증감률(실질)	17
<그림 IV-1> 정책목표금리 및 콜금리 추이	44
<그림 V-1> 가계대출 시나리오	58

[요 약]

□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

1. 내수위주의 경기부양정책

- 지나치게 내수에 의존하는 경기부양책은 가계의 차입소비성향을 높여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 유도
- 저금리정책이 이자수익보다 소비나 부동산투자를 선호하는 환경 조장

2. 확장적 통화정책의 지속

- 통화중시 통화정책으로부터 금리중시 통화정책으로 전환한 데 따르는 확장적 통화정책 지속으로 유동성 과잉현상 발생
 - 통화정책의 운용체계가 금리중시 통화정책으로 전환됨으로써, 총 유동성, M3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M3가 감시범위(8~12%)를 벗어난 채, 증가세 지속

3. 소매금융시장의 금쟁창과 경쟁심화

- 외환위기 이후 기업금융에 대한 위험부담 인식이 확대되고 기업들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늘어남에 따라 금융권에서 소매금융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

- 신용카드 전업사를 비롯한 여신전문회사와 은행간의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등 소액의 단기가계자금 대출 부문에서의 경쟁 가속화

4. 정부의 카드사용 장려정책과 소액신용대출 관련 규제 완화

- 카드사용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확대 등 신용카드 사용 유인정책과 신용카드 관련 규제 완화
- 카드전업사들의 공격적인 경영방식으로 인해 과당경쟁이 발생하여 신용상태에 대한 철저한 검증없이 마구잡이식 카드발급 초래

5. 부동산가격 등 자산가격 상승

- 저금리의 지속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부담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 가계대출에 대한 기회비용이 감소한 반면에, 저금리의 영향으로 가계대출을 이용하여 투자수익률이 높은 부동산투자를 선호

6. 기업들의 투자 자금수요 감소

- 외환위기 이후 일부 대기업의 무차입 경영선언 등과 함께 경기불확실성 확산으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를 위한 자금수요 감소
 - 상장제조업체의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은 2002년 9월말 현재 130.1%로 2001년말 185.7%에 비해 55.6%p나 하락하는 등 기업대출수요 감소

□ 정부의 정책대응과 금융권 부실화 가능성

1. 가계대출급증 억제정책

- 가계대출에 관련된 정부대책은 금융회사에 대해 건전성관련 감독을 강화하고 가계대출 이용자에 대한 보호와 홍보차원으로 크게 다섯 가지임

- 1) 가계대출의 신용리스크관리 강화
- 2)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상향조정
- 3)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건전성감독 강화
- 4) 신용카드부문에 대한 건전성감독 강화
- 5) 가계대출 이용자 보호대책

2. 거시경제정책의 문제점

1) 투자여건 개선 없는 저금리 정책

- 대내외 경제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내수중심의 경기부양을 위해 저금리기조를 유지하는 거시경제정책을 지속하였으나, 기업경영 환경개선이나 투자여건개선의 미흡 등으로 민간소비만을 촉진

2) 과잉유동성 흡수노력 부족

- 2002년 5월 정책금리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본원통화, M1, M2 및 M3 등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지 않았음에도,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등을 통해 과잉 유동성을 적절히 흡수하는 정책적 노력 미흡

- 더욱이 9월과 10월에는 통화안정증권 발행 잔액이 감소하여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 결과 11월 각종 통화지표들이 10월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시현

3) 정책혼선과 시장기대 형성 왜곡

- 통화정책운용에 대한 한국은행과 정부의 상충된 의견개진으로 향후 금리인상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시장기대형성이 왜곡되어 가계대출 증가세를 둔화시키지 못함
 - 금리인상을 예고하는 한국은행의 의견개진과 정책금리의 현 수준 유지를 주장하는 정부의 의견개진이 상충되어 한국은행이 의도하는 시장기대가 왜곡됨

4) 최근 정부의 금리정책 전환

- 콜금리 인상을 통한 자금회수의 부담으로 창구를 통한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조치에 따라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하향조정, 대출금리는 상향조정됨
 - 카드빚 상환불능자를 구제하면서 다른 한쪽으론 원리금상환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적 모순임

3. 가계대출정책의 문제점

1) 은행권의 여유자금 운용의 어려움

- 2000년 8월 대우사태이후 안전성을 선호하는 자금이 은행권으로 이동함에 따라 자금이 넘쳐나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의 여유

자금 운용처가 없음

2) 가계대출 억제정책의 부작용

- 가계대출을 무조건 억제하게 되면 서민들의 제도권 금융사 이용을 어렵게 해 서민들을 사채시장으로 내몰게 됨
- 가계대출 관련 각종 조치는 정부의 강권수준의 정책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관치금융 심화로 과연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

3) 부적절한 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 신용카드사에 대한 건전성 강화 감독방향이 지나쳐서 카드사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
 - 신용카드사에 대해서 현금서비스 한도액 중 미사용분에 대해서 1%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시장원리를 역행하는 것임

4) 신용관리에 대한 사회적 적응체제 부족

- 우리나라는 단기간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사회적 적응체제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이 아직 미비하며 여신전문금융사의 무분별한 카드발급과 대출관행도 여전

5) 가계부채의 만기구조 취약

- 선진국은 가계부채 중 10년 이상 장기 부채가 60~70%인데 반해, 우리는 3년 미만 중·단기 부채가 80% 이상임

4. 금융권 부실화 가능성

- 현재 금융권의 부실여신비율은 매우 건전한 상황은 아니어도 위기로까지 갈 수 있는 수치는 아님
- 금융권의 총여신은 2002년 6월말 현재 772.8조원이며 이중 고정이하의 여신은 32.1조원으로 총여신대비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4.2%임

□ 가계대출억제 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

1. 정책 시나리오

- 정부의 가계대출억제정책으로 가계대출에 변화가 발생했을 때 정책 변화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보기 위해 다음의 네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

- 1) 기본 시나리오(Base) : 경상GDP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현 수준으로 유지되는 경우
- 2) 시나리오1(Sim1) : 미시적 가계대출 억제정책 수단과 함께 점진적인 금리인상으로 가계대출 규모가 현 수준(2002년 3/4분기 현재 약 424조원)으로 억제
- 3) 시나리오2(Sim2) : 보다 강력한 정책대응으로 가계대출의 절대금액이 전분기대비 약 2.5%감소하고 금리는 2003년 평균금리가 2002년 대비 약 2.0%p 상승

4) 시나리오3(Sim3): 가계대출증가세가 최근(2001년~2002년 3/4분기)의 전분기대비 약 6%를 지속하는 경우

- 시나리오별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 가계대출 축소는 민간소비를 위축시켜 성장률과 물가를 떨어뜨리고 경상수지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표> 가계대출규모 변화의 거시경제적 효과

항목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base	Sim1	Sim2	Sim3
가계부채(전년말비,%)	16.5	24.7	28.0	27.4	10.4	0.0	-9.6	26.2
회사채 금리(%)	8.9	9.3	7.0	6.6	6.9	7.0	8.6	6.8
GDP증가율(전년비,%)	10.9	9.3	3.0	6.1	5.8	5.0	3.9	6.9
민간소비증가율	11.0	7.9	4.2	6.9	5.2	3.5	1.2	7.6
고정자본형성증가율	3.7	11.4	-1.7	3.7	4.8	4.5	3.6	5.3
소비자물가(전년비,%)	0.8	2.3	4.1	2.7	3.2	3.0	2.8	3.4
경상수지(억달러)	244.8	168.7	133.9	60.1	10.7	27.3	51.8	-12.2

주: 2002년은 추정치

- 거시경제정책으로 정책금리를 인상시키고 가계대출규모를 현 수준 또는 그 이하로 억제하면, 물가는 안정되고 경상수지도 개선되나 경제성장세를 둔화시킬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가계대출을 급하게 억제하는 무리한 정책보다는 경기회복세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가계대출의 급증세를 서서히 둔화시키는 정책이 요망됨

□ 향후 정책방향 및 정책대응

1. 장기분할식 대출 전환

- 채무자들의 자발적인 대출 상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들이 일시 상환 대출의 만기를 장기 분할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

2. 시장친화적 감독정책

- 금융당국의 역할은 직접적으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나 연체율 등 경영방침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보다는 금융회사가 자산건전성, 대손충당금 및 적립금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방침, 관행 및 절차를 수립·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쳐야 함
- 금융회사의 경영방식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간접적인 조치 등으로 경고를 주고 문제가 되는 금융회사는 과감하게 퇴출하는 것이 바람직
 - 금융당국은 부작용이 많은 직접규제보다는 신용분석을 통해 대출하고 부실관리를 잘 하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

3. 가계대출관련 법규 및 제도 정비

- 소비자 신용 및 인터넷뱅킹 등에서의 가계대출관련 법규를 재정비

- 신용불량자의 등록 기준 합리화와 신용불량 등록에 따른 사회적 패널티와 구제제도 합리화
 - 무조건적 대량사면은 도덕적 해이를 확대시켜 신용사회 정착을 요원하게 할 것이므로, 개인별로 채무상환정도에 따른 사면제도의 기준 마련

4. 가계부문의 교육 및 홍보 강화

- 그 동안 정부정책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정책위주였으나 향후에는 가계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
- 가계대출관련 소비자 상담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신용불량자 등록에 따르는 사회적 패널티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교육 홍보 강화

5. 자본시장의 대기성 자금을 주택금융시장으로 유도

- 주택관련 대출을 단기성 가계대출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주택금융시장의 활성화 및 선진화 없이는 가계대출 문제의 해결이 어려움
 - 현재 단기 부동산화된 자금을 주택금융시장으로 유도하는 정책 필요

6. 거시경제정책의 공조회복 및 과잉유동성 흡수

- 풍부한 시중자금을 가계로부터 기업으로 유도하고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기업경영환경이나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경기회복을 위한 현 거시경제정책기조 유지

- 대내외 경제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개선될 때까지 현 정책목표금리를 유지하되, 과잉유동성의 적절한 흡수에 노력
- 통화정책운용에 대한 한국은행과 정부간의 정책공조를 회복하여 한국은행이 의도하는 시장참여자들의 시장기대형성에 노력

7. 금융시장 환경 개선

- 금융기관에 대해 다양한 자산운용이 가능하도록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어, 위험분산을 위한 자산유동화를 활성화하고 금융상품의 개발 노력
- 채권시장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시장전체 효율성을 제고
- 단기지향적 직접금융시장에 있어 투자패턴의 장기화 유도

1. 서론

- 최근 우리 경제는 자산거품과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의 부실화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부상
 - 2002년 9월말 현재 가계의 금융부채규모는 435.6조원으로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7년말의 211.2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 반면에 가계부문 금융자산의 증가속도는 둔화되어 가계부문의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금융자산/금융부채 비율은 2002년도 9월말 현재 2.14배로 외환위기 이전인 지난 1996년 수준(2.4배)보다 크게 낮아졌음
- 더욱이 소득 증가율을 능가하는 빠른 속도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가계수지가 부실화될 가능성 상존
 - 이는 이미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카드사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 나아가 은행을 비롯한 다른 금융회사 자산의 질을 저하시켜 금융권전체의 부실화로 이어지면서 내채(內債)에 의한 금융위기론의 가능성마저 대두되고 있는 실정
- 정부는 가계대출 급증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미시적 차원의 정책을 시행
 - 2002년 들어서만도 가계대출 및 신용카드채권에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상향조정(02.2, 02.4, 02.10)하였으며 향후 추가적으로 상향조정(03.1)이 예정되어 있음

- 또한 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신용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였으며(02.2)
 - 가계대출을 확대하는 은행에 대해 총액대출한도 배정상의 불이익을 강화(02.4)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커다란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음
 - 그 밖에도 '다중채무자에 대한 개인신용회복지원(work out)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개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상황
-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정책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대책이 대부분이지만 직접적으로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를 규제하는 정책도 사용
- 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경제현상을 한 면에서 막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다른 면에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
- 초저금리가 가계의 금융부채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저축률을 끌어내리는 등의 부작용을 낳았지만, 금융부채 가운데는 주택구입이나 생업자금 확보 등 바람직한 소비증가에 기여한 측면도 있음
- 2001년 민간부문에 있어 소비지출이 소득증가율을 상회하였으며 2002년 상반기 중에도 가계의 실질 소비지출이 전년동기대비로 8.1% 증가하여 실질 국민총소득증가율 6.9%를 상회
-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의 경우와 같이 지가하락에 따른 버블붕괴의 가능성은 적으며 기업과 은행의 경영실적은 개선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 금융위기로 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는 것도 사실임
 - 또한 전세계적인 자산가격 거품 및 디플레현상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도 사실임
- 그러나 기업으로의 자금공급 증가와 설비투자 증가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없는 가계대출 억제정책은 가계가 직면한 유동성 제약을 외생적으로 강화하여 소비지출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임
- 가계대출의 증가가 소비를 늘렸다고 보다는, 소비증가로 인한 대출수요 증대와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대출여력 증가가 가계대출을 증가시킨 측면이 더 강함
- 본 보고서에서는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과 정책과제를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구조적 측면, 거시경제정책 측면, 실물경제적 측면 및 통화정책 차원에서 다양하게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함

II. 가계부채 현황

1. 가계부문의 금융부채 현황

○ 가계부문의 금융부채 잔액은 2002년 9월말 현재 435.6조원으로 금융자산잔액인 931.5조원의 46.8% 수준이며 이로써 개인의 금융부채 상환능력(금융자산/금융부채비율)은 2.14를 기록하고 있음(<표 II-1> 참조)

- 동 비율은 1998년말 2.88로부터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으며, 이는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

- 소득 규모나 금융시장 구조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이는 프랑스(5.5배), 미국(4.2배), 일본(3.7배)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표 II-1> 개인부문의 금융자산 및 부채 증가 추이

(단위: 조원, 배)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1/4	2/4	3/4
금융자산 증가액	309.9	264.5	265.4	348.7	127.8	100.1	113.8
금융자산 잔액	3,017.6	3,267.3	3,592.5	4,000.6	4,137.6	4,189.1	4,310.6
금융연관비율	6.91	6.86	6.92	7.36	7.48	7.46	7.55
비금융부문 부채잔액 ¹⁾	909.9	927.3	991.0	1,081.2	1,121.8	1,152.0	1,190.2
<부채잔액/명목GNI>	<2.08>	<1.95>	<1.91>	<1.99>	<2.03>	<2.05>	<2.08>
기업부문	631.1	614.7	618.9	639.3	649.3	652.1	663.3
개인부문	226.3	243.7	293.5	353.2	381.2	410.2	435.6
<부채잔액/명목GNI>	<0.52>	<0.51>	<0.57>	<0.65>	<0.69>	<0.73>	<0.76>
정부부문	52.4	68.9	78.6	88.7	91.2	89.6	91.3
비금융부문 자산잔액 ¹⁾	1,051.1	1,144.5	1,276.4	1,466.8	1,524.1	1,548.2	1,591.7
[금융자산/금융부채]	[1.16]	[1.23]	[1.29]	[1.36]	[1.36]	[1.34]	[1.34]
개인부문	651.4	703.7	775.2	862.6	893.1	911.0	931.5
[금융자산/금융부채]	[2.88]	[2.89]	[2.64]	[2.44]	[2.34]	[2.22]	[2.14]

- 주: 1) 비이자부채 및 자산 제외
 2) < >내는 명목GNI에 대한 비율(배)
 3) []내는 금융자산/금융부채(배)

자료: 한국은행, 자금순환동향 각 호

- 총소득대비 부채비율(부채/명목 GNI)도 기업부문이나 정부부문을 포함하는 비금융부문의 동 비율은 1998년말과 2002년 9월말 모두 2.08로 변동이 없는 반면에,
 - 가계부문의 동비율은 1998년말 0.52에서 2002년 9월말 0.76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가계소득 증가율을 능가하는 가계부채 증가세의 지속은 가계부실화의 우려감을 증폭시키고 있음(<표 II-2 > 참조)
 - 현재의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02년말 명목GDP에 대한 가계금융부채비율은 70% 후반으로 미국의 78.7% 수준에 육박
 - 미국의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이 직접금융 중심이고 은행 등은 주로 가계금융에 치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가계부채비율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님
 -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금융부채비율의 경우 현재의 속도로 증가한다면 2002년말 120%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
 - 이는 미국의 107%와 일본의 112%를 능가하는 수치

<표 II-2> 국내총생산 및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금융부채비율의 국제 비교

(단위: %)

구분	한국						미국	일본
	'97	'98	'99	'00	'01	'02.6	'01	'00
GDP 대비 가계금융부채	54.5	50.9	50.5	56.2	64.8	72.9	78.7	69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금융부채	82.5	71.9	75.7	86.9	99.8	N.A	107.0	112

자료: 금융감독위원회 보도자료, 2002년 10월 11일 한국은행 자금순환동향

2. 금융권별 가계부채 현황

- 가계부문의 부채증가는 외환위기 이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금융권으로부터 가계부문으로 다양한 형태의 신용공여가 용이하게 이루어진 데에 기인(<표 II-3> 참조)
 - 이에 따라 금융권이 제공하는 가계대출, 판매신용 등 가계신용의 증가세가 지속하여 2002년 9월말 현재 가계부문의 신용공여잔액은 424.3조원에 달함
 - 형태별로는 가계대출잔액이 379.9조원, 판매신용잔액은 44.3조원임
 - 문제는 증가세가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점으로 2002년 들어서는 전분기대비 7~8%, 전년동기대비 30%대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왔음
- 가구당 본 가계신용 잔액은 2002년 9월말 현재 2,906만원으로 2001년 3월말 1,930만원에 비해 불과 1년 반 사이에 50% 이상 증가

<표 II-3> 가계신용 잔액 추이

(단위: 조원, %)

	2001년				2002년		
	3말	6말	9말	12말	3말	6말	9말
가계신용	276.2	296.0	316.3	341.7	368.1	397.5	424.3
	<3.5> (24.3)	<7.1> (24.0)	<6.9> (25.9)	<8.0> (28.0)	<7.7> (33.3)	<8.0> (34.3)	<6.7> (34.1)
○가구당(백만원)	19.3	20.7	22.1	23.4	25.2	27.2	29.1
가계대출	249.5	265.0	283.2	303.5	328.8	354.4	379.9
	<3.5> (25.1)	<6.2> (23.2)	<6.9> (24.7)	<7.2> (25.9)	<8.3> (31.8)	<7.8> (33.7)	<7.2> (34.2)
판매신용	26.7	30.9	33.1	38.2	39.3	43.1	44.3
	<3.5> (17.1)	<15.8> (31.4)	<7.0> (37.4)	<15.2> (47.7)	<3.0> (47.0)	<9.6> (39.2)	<2.9> (33.8)

주: < >는 전기말대비, ()는 전년동기말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 최근 가계의 소비지출 동향과 특징", 2002.10.3

- 가계부문의 부채 중 가계대출은 2002년 들어서는 매분기 25조원이 상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은행권을 통한 가계대출이 17조원 이상으로 총대출의 70%에 달하고 있음(<표 II-4 > 참조)
 - 비은행권의 가계대출도 다양한 형태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상반기에는 카드사와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기관의 대출이 크게 늘었으나,
 - 여신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정부의 가계대출억제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하반기 들어서는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등 저축기관과 보험사 등의 대출이 크게 늘어났음¹⁾
 - 반면 카드사의 가계대출은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할부금융사의 가계대출도 크게 축소

1) 2002년 7월부터 여신전문기관에 대해 본업업무가 아닌 업무의 비중을 50% 이하로 축소하는 조치가 도입됨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들의 경우 현금대출(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업무비중을 50% 이하로 축소하기 위해 현금서비스한도 관리를 강화한 데 기인

<표 II-4> 금융권역별 가계신용 증감 추이

(단위: 10억원, 말잔기준 증감액)

	2001년				2002년		
	1/4	2/4	3/4	4/4	1/4	2/4	3/4
가 계 신 용	9,327	19,742	20,374	25,332	26,464	29,333	26,790
가계대출	8,423	15,528	18,193	20,307	25,310	25,571	25,539
(은 행)	5,962	12,558	12,868	18,089	17,798	18,043	17,241
(저축기관 ¹⁾)	-1,697	-1,006	867	754	579	877	2,873
· 상호저축은행	-455	-475	532	901	684	-709	810
· 신용협동조합	-72	-95	17	48	-2	75	277
· 상 호 금 용	-83	227	365	217	26	1,499	1,604
(보험기관)	1,229	1,445	1,385	1,434	1,737	958	2,091
(여신전문기관)	3,059	2,925	3,421	663	6,151	6,337	5,312
· 할부금융회사	508	627	643	-67	2,025	2,155	1,352
· 신용카드회사 ²⁾	2,551.2	2,298	2,779	730	4,127	4,182	3,960
(국민주택기금)	-131	-393	-348	-633	-955	-644	-1,978
판매신용 ³⁾	904	4,213	2,181	5,025	1,154	3,762	1,251
(할부금융회사)	419	783	752	-184	458	1,039	598
(판매회사)	-965	-132	-301	261	-401	110	-406
(신용카드회사)	1,450	3,563	1,730	4,948	1,098	2,613	1,059

주: 1) 은행신탁, 상호저축은행, 신탁,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2)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3) 할부금융회사, 신용카드회사 등 여신전문기관, 판매회사(백화점, 자동차사 및 가전사)가 소비자의 물품구입과 관련하여 공여한 신용

자료: 한국은행, " 최근 가계의 소비지출 동향과 특징", 2002.10.3

- 가계부문의 부채 중 판매신용의 경우, 그 절대액 자체는 많지 않으나 가계의 소비지출을 보여주는 지표로 유용하며 2001년과 비교해서 절대액 기준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

- 2002년 2분기에 판매신용이 3.8조원이나 증가한 것은 특소세 인하에 기인한 바가 큼

- 가계대출이 기업을 포함하는 대 민간 원화대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표II-5> 참조)

- 금융권 전체로 보아 대 민간 원화대출금에 대한 가계대출금 비중은 2000년말 46.7%에서 2002년 9월말 현재 58.1%로 11.4%p 확대
- 은행권의 경우는 가계대출 비중의 확대 폭이 더욱 커, 2000년말 34.8%에서 2002년 9월말 현재 47.8%로 13%p나 확대

<표 II-5> 금융권의 대 민간 원화대출에 대한 가계대출 비중 추이

	2000년	2001년				2002년		
	12말	3말	6말	9말	12말	3말	6말	9말
금융권전체	46.7	48.0	49.9	51.3	54.8	55.7	57.0	58.1
은행부문	34.8	36.2	38.6	40.4	44.2	45.3	46.4	47.8

자료: 한국은행, " 최근 가계의 소비지출 동향과 특징", 2002.10.3

- 금융권별 가계대출 점유 비중을 살펴보면 은행권이 전체 대출의 61.7%를 점유하고 있으며 농수축협 등 상호금융이 21.1%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표 II-6> 참조)

- 가계대출 중 서민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금융 등의 금융기관 대출이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7%

<표 II-6> 금융권별 개인대출 취급비중 현황

(2002.8.25 현재: 조원)

	은행	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	신용카드	보험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금융	기타	전체
개인대출	234.8	6.3	10.6	5.4	12.2	17.8	12.4	80.2	1.1	380.8
점유비중	(61.7)	(1.7)	(2.8)	(1.4)	(3.2)	(4.7)	(3.2)	(21.1)	(0.2)	(100.0)
전체대출 ¹⁾	409.4	17.0	11.5	29.1	42.0	17.5	12.3	79.3	5.8	623.9

주: 1) 02.3말 기준, 은행, 상호금융은 02.5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금융권 개인대출현황

출처: 은행연합회 개인대출자료

3. 가구별·연령별 가계대출의 구성 현황

- 2002년 8월 25일 현재 은행연합회에 집중된 개인대출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은행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차입자 1인당 대출금액 평균은 약 3,800만원 수준이며 차입가구당 대출금액 평균은 약 5,000만원으로 추정²⁾
 - 이에 따라 가구당 대출금액 평균이 가구당 연간 가처분소득(3.5인 기준: 2,700만원)의 2배 수준에 육박
 - 또한 차입금의 평균이자율이 연 10%로 가정하면 차입가구당 평균적으로 소득의 약 18.5%를 지급이자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
- 금융권별 차입자수의 총계는 1,218만명, 전체 개인 차입자수는 약 1,000만명
 - 가구 내 중복차입자 비중을 25%로 전제할 경우, 금융권 차입가구는 약 750만가구로, 2001년말 총가구인 1,467만 가구의 약 51.1% 수준으로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절반정도가 금융권에서 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2)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분기별 가계신용동향과 차이를 보이며 한국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가구별로 본 가계신용은 2002년 9월말 현재 그 잔액은 2,906만원임 은행연합회의 개인대출정보는 모든 금융기관(은행, 보험, 상호금융, 중금, 할부금융, 신용카드,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로 관리되는 1000만원 이상의 개인대출정보를 모은 것으로 개인사업자대출, 농어민의 상호금융 및 은행 등의 한도거래대출이 모두 개인대출잔액으로 나타나, 이로 인한 개인대출이 과다 계상되는 측면이 있음 특히 2002년 7월 1일 이후에는 신규취급(기간연장포함)된 1000만원 미만 소액대출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도 동 자료에 포함되고 있음 또한 1000만원 미만 소액대출에 관한 정보집중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여 비은행금융기관의 개인대출의 경우는 과소 계상될 우려도 있어 자료 분석에 주의를 요함

-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인구의 약 3.1%인 100만명이 2개이상의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금융권별 차입자수는 은행이 660만명, 상호금융이 209만명, 할부금융이 93만명 등의 순서임(<표 II-7> 참조)

<표 II-7> 금융권별 차입자 수 및 평균 차입액

(만명)

은행	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	신용카드	상호금융	보험	새마을금고	신협	총계
660.0	15.3	92.9	92.1	208.5	46.8	58.5	40.4	1,218.1

자료: 한국은행, 금융권 개인대출현황

출처: 은행연합회 개인대출자료

- 연령대별로 차입자수를 보면 30대 차입자가 금융권 전체 차입자의 31.5%로 제일 높음(<표 II-8> 참조)

<표 II-8> 각 연령대별 차입자 현황

(2002.8.25 현재: 천명, %)

	30세미만	30 ~ 40	40 ~ 50	50 ~ 60	60세이상	전체
차입자수	1,358	3,156	2,998	1,482	1,013	10,009
	(13.6)	(31.5)	(30.0)	(14.8)	(10.1)	(100.0)
인구대비 차입자수비중	6.4	38.1	43.1	34.3	19.6	21.8

주: ()내는 점유 비중

자료 : 한국은행, 금융권 개인대출현황

출처: 은행연합회 개인대출자료

- 총인구에 대한 차입자수의 비중은 40대가 43.1%로 수위를 차지하고, 차입자당 평균 차입규모는 50대가 5,090만원으로 제일 많음
- 각 금융권의 연령대별 대출 비중을 볼 때 40대가 36.4%로 가장 높음(<표 II-9> 참조)
 - 40세 이상의 주요 대출기관으로는 은행,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의 비중이 높은 반면에, 40세 미만의 주요 대출기관으로는 할부금융사와 신용카드사의 비중이 높음
- 특히 대출상환능력이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30세 미만의 대출이 주로 할부금융사(전체 차입금규모의 19.4%)나 신용카드사(27.3%)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30세 미만의 차입자는 차입규모는 크지 않지만 소득이 적어 상환능력이 부족해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큰 계층임

<표 II-9> 각 금융권의 연령대별 대출비중

(금액기준: %)

	30세미만	30 ~ 40	40 ~ 50	50 ~ 60	60세이상	계
은행	5.7	29.9	37.2	18.5	8.7	100.0
상호저축은행	5.8	23.8	39.3	19.3	11.8	100.0
상호금융	2.3	16.3	35.8	25.6	20.0	100.0
할부금융	19.4	37.6	29.8	9.7	3.4	100.0
신용카드	27.3	37.9	24.9	7.6	2.3	100.0
보험	5.3	34.4	38.9	15.6	5.8	100.0
전체	5.6	26.8	36.4	19.8	11.3	100.0

주: 2002년 8월 25일 현재

자료: 한국은행, 금융권 개인대출현황

출처: 은행연합회 개인대출자료

4. 가계대출 연체율과 신용불량자 현황

○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하반기 이후 다소 상승하였으나 최근 1.5%대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표 II-10> 참조)

- 2002년 11월말 현재 가계대출 연체율은 1.57%를 기록

○ 반면, 신용카드 과다발급, 현금서비스 한도축소 등에 따라 카드사의 연체율은 급격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 카드사의 연체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2002년 11월 들어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11월말 현재 11.7%(1일 이상 연체율 기준)까지 상승

- 미국 등 선진국에서 사용되는 1개월 이상 연체기준의 연체율도 9.2%로 미국의 2배 가까이 되는 수준

- 최근의 카드사의 연체율 급증세는 카드사들이 신용이 낮은 고객과 다중채무자에 대한 현금서비스 한도를 축소한 결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전망

<표 II-10>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

(단위: %, 기말기준)

	01.12월	02.3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은행 가계대출	1.21	1.36	1.24	1.24	1.72	1.56	1.65	1.57
은행 겸영카드	7.38	8.47	9.38	10.12	11.03	11.19	11.29	12.15
전업카드사	5.8	6.2	7.92	8.6	9.0	9.2	10.4	11.7

주: 1) 02.7.1일부터 신용불량자 산정기준 변경(30만원 초과 연체금액만 해당)

2) 1일 이상 연체비율 기준

자료: 금융감독위원회

○ 은행권의 가계대출 중 최근 신규대출의 70% 이상이 주택담보대출로 타 금융권 대출이나 신용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성 확보 (<표 II-11> 참조)

- 다만 자산가격의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부동산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은행권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은 있으나 향후 부동산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낮음

<표 II-11> 은행권 가계대출의 증가 추이 및 주택담보대출 비중

(단위: 조원)

	02.3월	6월	7월	8월	9월	1~9월
은행 가계대출 월증가액(A)	8.0	4.9	4.1	5.5	6.2	51.5
주택담보대출 월증가액(B)**	5.2	3.3	3.0	3.9	4.8	36.4
B/A(%)	65.0	71.7	73.2	70.9	77.4	70.9

자료: 금융감독위원회

주: 주택자금대출 포함

○ 개인신용불량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점도 문제(<표 II-12> 참조)

- 대출 및 신용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인해 개인신용불량자가 11월 말 현재 257만명 돌파하였음

- 20대 신용불량자가 45만명에 육박하여 전체 개인신용불량자의 17.7%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0만원 미만의 금액이 전체 개인신용불량자의 절반 수준

- 2003년부터 소액금융정보가 집중되면 소위 카드 돌려막기나 대출한도 유지 등이 어려워, 향후 개인신용불량자 수는 더욱 증가할 예상

<표 II-12> 개인신용불량자의 연령별 및 금액별 현황

(단위: 천명, %)

연령별			금액별(2002.10.31)		
구분	2001.12.31	2002.11.31	구분	누적인원	누적비율
10대	12(0.5)	7 (0.3)	50만원 미만	101	4.0
20대	408(16.7)	464 (18.0)	100만원 미만	245	9.7
30대	704(28.7)	738 (28.7)	500만원 미만	874	34.6
40대 이상	1,326(54.1)	1,365 (53.0)	1000만원 미만	1,293	51.1
계	2,450(100.0)	2,574(100.0)	1000만원 이상	1,236	48.9

자료: 전국은행연합회

- 개인신용불량자가 2002년 11월말 현재 20세 이상 인구(3,360만명)의 약 7.6% 수준으로 향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사회적 문제화 될 가능성 존재
- 개인신용불량자의 거의 절반 가량이 20~30대로 부채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계층임

Ⅲ.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

1. 내수위주의 경기부양정책

- 정부는 2000년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민간소비를 유도하는 거시경제정책을 시행(<표 Ⅲ-1> 및 <그림 Ⅲ-1> 참조)
 -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2002년 상반기까지 실질가계소비의 증가세가 실질국민총소득(GNI)의 증가율을 상회하여, 민간소비가 최근 국내경기 회복을 주도
 - 소득증가율보다 높은 소비증가율의 지속은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상승이나 가계대출 등에 의해 주로 기인된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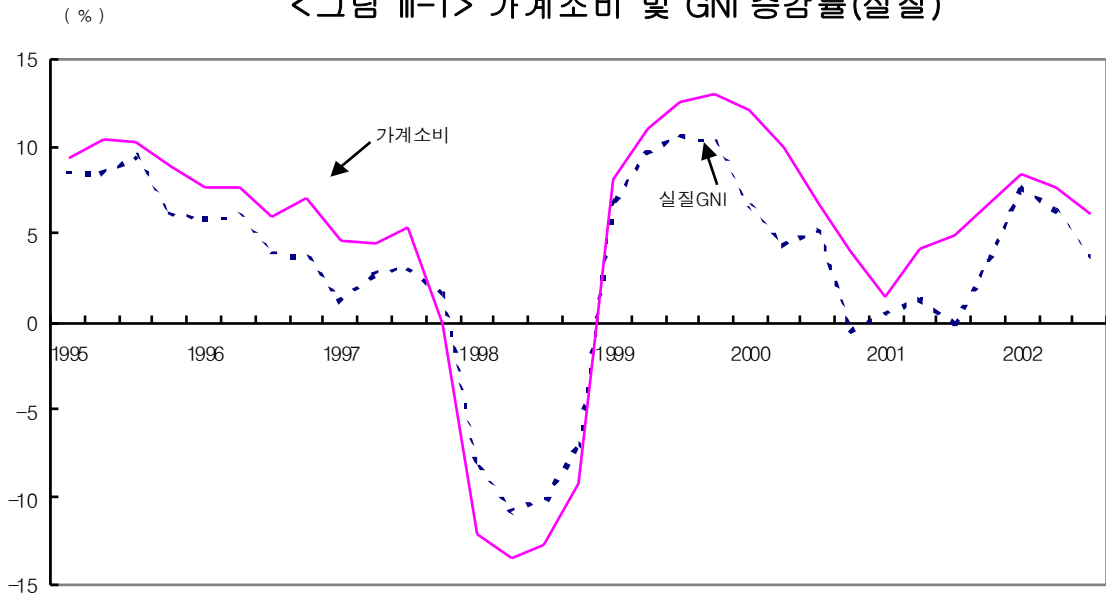
<표 Ⅲ-1> 가계소비와 국민총소득 증감률 추이

(전년동기대비, %)

	2000년	2001년						2002년			
		1/4	2/4	3/4	1/4~3/4	4/4	연간	1/4	2/4	3/4	1/4~3/4
실질 GNI	3.6	0.5	1.3	0.0	0.6	3.4	1.3	7.7	6.3	3.8	5.9
실질 가계소비	8.1	1.4	4.1	4.9	3.5	6.7	4.3	8.4	7.7	6.1	7.4

자료: 한국은행

<그림 Ⅲ-1> 가계소비 및 GNI 증감률(실질)



- 특히, 2001년 말부터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던 특소세 인하 조치 등이 민간소비를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이는 가계의 자금수요를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
 - 지나치게 내수에 의존하는 경기부양책은 가계의 차입소비성향을 높여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 유도
- 저금리기조정책 역시 이자수익보다 소비나 부동산투자를 선호하는 환경을 조장
 - 저금리의 지속에 따른 실질금리 하락 등도 저축률 하락을 촉진
 - 1998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세였던 총저축률(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 대한 총저축의 비중)이 2001년부터는 개인저축률의 하락세로 금년 상반기에는 26.9%를 기록(<표 Ⅲ-2> 참조)

-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경쟁으로 유동성 제약이 완화된 점과 부동산가격 상승 등으로 가계보유자산이 증대한 점, 가계부채증가로 이자부담이 증가한 것도 저축률의 하락세에 일조

<표 III-2> 총저축률과 부문별 저축률 추이

(%)

	1980년	1988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³⁾	2002년상반 ⁴⁾
총저축률 ¹⁾	24.4	40.5	33.4	33.9	32.9	32.4	29.9(29.5)	26.9
민간 ²⁾	19.1	32.8	22.8	24.4	23.2	19.3	17.1	..
개인	8.3	18.3	12.6	19.9	13.0	10.5
기업	10.8	14.5	10.1	4.4	10.2	8.9
정부 ²⁾	5.2	7.7	10.6	9.6	9.7	13.0	12.8	..

자료: 한국은행

주: 1) 총저축/국민총처분가능소득

2) 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 대한 민간 및 정부저축의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각 부문의 저축성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3) ()내는 상반기

- 저금리기조의 지속은 저축을 통한 이자수익 및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부담, 즉 소비의 기회비용을 저하시키고 가계의 차입소비성향을 높여 민간소비 촉진
 - 이와 함께 2001년말부터 시행된 특소세인하조치, 신용카드 이용확대, 부동산 가격 등 자산가격 상승 등도 민간소비증가에 크게 기여
 - 소비지출패턴의 고급화·대형화 경향이 뚜렷하여, 자동차, 에어컨 등의 특소세 인하품목들과 함께, 위스키, 담배, 수입악기, 시계 등을 중심으로 가계소비지출의 수입품의존도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차입소비율도 급속히 상승(<표 III-3> 및 <표 III-4> 참조)
 - 특히, 경상소득이 적거나 일정하지 않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충동구매, 무분별한 카드사용이나 과소비경향도 증가

<표 III-3> 가계 소비지출의 수입품의 의존도 추이

(단위: %)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상반
수입재 화소비 /전체재 화소비	9.0	12.4	15.8	18.0	19.5

자료: 한국은행

<표 III-4> 내수용소비재 출하 및 소비재 수입 추이

전년동기대비, %

	2001년					2002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1/4-3/4
내수용소비재 출하	-8.2	5.1	10.6	0.8	1.9	12.0	4.3	5.4	7.2
소비재수입(물량지수)	9.4	3.3	7.6	15.1	8.9	19.6	21.9	22.7	21.4

자료: 한국은행

- 최근 해외여행증가 등을 통한 소비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여행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표 III-5> 참조)
- 이러한 해외소비 급증은 서비스수지의 만성적인 적자기조를 지속시켜 경상수지를 악화

<표 III-5> 가계의 해외소비지출 추이

	2000년	2001년	2002년 1/4	2/4	3/4	1/4-3/4
관광목적출국자수(명)	2,166,751 (56.2)	2,646,847 (22.2)	802,783 (41.2)	776,937 (27.1)	1,037,474 (21.9)	2,617,194 (28.8)
가계의 해외소비 (실질, 10억원)	3,937.6 (62.9)	4,546.7 (15.5)	1,292.2 (38.1)	1,494.7 (36.2)	1,623.3 (16.6)	4,410.2 (30.3)
여행수지(백만달러)	-297.6	-1,292.9	-691.0	-947.8	-1,138.9	-2,777.7
신용카드해외사용실적 (백만달러)	1,539.0 (68.9)	1,909.0 (24.0)	568 (34.9)	576 (26.0)	669 (27.7)	1,813.0 (29.5)

자료: 한국관광통계(한국관광공사), 한국은행

주: 1) 상반기 수치

2) ()내는 전년동기대비증감률, %

○ 민간소비가 증가하면서 할부금융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신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층,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인의 대출이 크게 증가

- 2002년 상반기에 25~34세 청년층 가구주의 소비지출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크게 상회(<표 III-6> 참조)

- 특히, 25~29세 가구주의 소비지출이 전체 소비를 주도

<표 III-6> 가구주 연령별 소득, 소비지출 증감률 추이

(전년동기대비, %)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상
평균	소득	-8.2	3.9	7.4	9.7	10.2
	소비지출	-10.7	13.5	9.6	8.5	7.4
25~29	소득	-12.6	1.6	9.0	6.6	11.7
	소비지출	-11.2	7.7	14.2	5.7	17.9
30~34	소득	-6.4	1.9	9.5	3.8	11.9
	소비지출	-9.2	14.8	8.0	5.4	13.2
35~39	소득	-9.4	4.2	9.9	11.5	14.5
	소비지출	-11.6	15.3	12.3	9.6	10.2
40~44	소득	-3.4	7.0	2.7	12.1	7.1
	소비지출	-10.4	15.0	5.4	13.2	4.8

출처: 한국은행

자료: 통계청,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동향

2. 확장적 통화정책의 지속

○ 통화중시 통화정책으로부터 금리중시 통화정책으로 전환한 데 따르는 확장적 통화정책 지속으로 유동성 과잉현상 발생

- 통화정책의 운용체계가 금리중시 통화정책으로 전환됨으로써, 총 유동성, M3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M3가 감시범위

를 벗어난 채, 증가세 지속(<표 III-7> 참조)

- 1997년말 통화정책의 운용체계(monetary policy framework)가 통화 타겟팅(monetary targeting)으로부터 인플레이션 타겟팅(inflation targeting)으로 전환
- 2001년부터 총유동성을 의미하는 M3가 통화정책의 중간목표로부터 감시지표(monitoring indicator)로 격하되어 통화정책운용에 있어 M3에 대한 상대적 관심도 약화
- 2002년 3월부터 M3 증가율의 감시범위(8~12%)를 벗어나기 시작하여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연속 13%대에 머물면서 총유동성 과잉 지속
 - 더욱이 가계부채문제가 심화된 9월 이후 최근까지 M3 증가율이 소폭이지만 상승세 지속
- M2, MCT 및 MCT+도 8월에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듯하였으나 상승세를 지속하여 11월에 전월(각각 12.1%, 10.6% 및 13.0%)보다 상승한 12.7%, 11.1% 및 13.9%를 각각 기록
 - 본원통화 및 M1도 11월에 전월보다 3.0%p와 2.9%p 상승한 12.7%와 20.4%를 각각 기록
- 금리에 비해 각종 통화지표들에 대한 관심 약화로 그 증가세가 둔화되지 않고 상승세 지속

<표 III-7> 주요 통화지표 증가율 추이

(평잔기준, 전년동월대비증가율, %)

	M3	M2	MCT+ ¹⁾	MCT	M1	본원통화
2002.1	11.6	12.6	12.4	11.9	16.3	7.1
2	11.9	14.9	13.9	12.8	27.7	20.3
3	12.9	16.1	14.4	13.3	24.1	17.6
4	13.7	15.7	14.8	13.5	22.7	17.0
5	13.7	14.5	14.1	12.8	24.2	17.8
6	13.5	13.8	14.0	12.7	23.3	16.3
7	13.0	12.3	12.7	11.1	21.0	14.9
8	12.4	11.8	12.2	10.7	20.9	15.1
9	12.4	12.1	12.7	11.0	19.2	15.3
10	12.5	12.1	13.0	10.6	17.5	9.7
11p	13.7	12.7	13.9	11.1	20.4	12.7

주: 1) MCT+표지어음+RP+금융채

3. 소매 금융시장의 급팽창과 경쟁심화

- 외환위기 이후 기업금융에 대한 위험부담 인식이 확대되고 기업들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늘어남에 따라 금융권에서 소매금융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
 -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경제개발 초기부터 은행중심의 시장구조를 이루어 왔으며 만성적인 자금초과수요 상태에서 소매금융시장은 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음
 - 외환위기 이후 기업금융에 대한 위험부담은 커진 반면,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소매금융시장이 대두
- 소매금융의 제도권화 확대

- 소득수준 1만 달러 시대에 근접하면서 제도금융권이 소매금융시장을 잠재력이 있는 시장으로 평가함에 따라 개인대출을 비롯한 소매금융영업 확장
- 수익성 및 건전성 차원에서 가계대출에 대한 금융권의 주요 영업전략이 기업금융에서 소매금융으로 전환
 - 기업대출에 비해 가계대출이 은행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위험가중치와 연체율이 낮음
 - 수익성 측면에도 기업대출에 비해 가계대출의 예대마진이 커서 유리
- 구조조정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계대출을 선호
 - 은행권은 기업금융을 담당하던 은행들은 심한 구조조정 중에 있었으며 소매금융에 치중하던 은행들이 리딩뱅크로 부상함에 따라 대부분의 은행들이 안정적인 수익원으로써 가계대출을 확대하는 영업전략을 천명
 - 은행권은 각종 가계대출관련 신상품을 개발하고 인터넷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계대출 확대 전략을 구사
 -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의 가계대출 상품에 대해 적극적 마케팅 전략을 펼침
 - 할부금융사들도 일부 대형사를 위주로 대출카드라는 상품을 만들어 가계대출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

-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 등의 서민금융기관도 다양한 가계대출상품을 내놓으면서 가계대출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지자 무리한 영업확대 전략 추구
- 외환위기 이후 국내금융기관을 직접 소유하거나 제휴관계의 확대 등을 통해 국내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던 외국금융기관도 선진화된 마케팅 기법을 도입해 가계대출시장에 적극 참여
 - 1998년 이후 투자촉진법 개정으로 외국자금의 유입이 자유로워지자 일본계 대금업체도 대거 진출하여 사채시장의 틈새시장 잠식
 -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여신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신용불량자 등 제도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계층이 크게 증가한 점을 이용
 - 이들 일본 대금업체는 간편하고 빠른 대출(1시간 이내), 낮은 조달금리, 신용평가 및 채권관리시스템의 적용, 현대화된 매장 등 선진 마케팅 기법을 이용 소액대출시장 잠식
- 일본 대금업체의 약진에 자극을 받은 서민금융회사 등이 사금융업체 대상고객에 대한 제도권 금융의 영업을 확대
 - 서민금융기관들이 신용불량 기록이 없을 경우 신용심사를 대폭 완화하여 소액 대출을 확대(월 2%에 500만원 대출 등)
 - 소액 대출영업도 경쟁이 과열되면서 기존의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더 이상의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불량고객에까지 일부 서민금융기관들이 고금리 자금대출
- 유통업, 자동차, 통신 등의 비금융기업들도 카드사 및 할부금융사를

인수·설립하거나 기존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가계신용시장에 진출 확대

- 카드사들이 다단계회사와 같은 비금융회사와 제휴를 통해 영업 확대 도모

○ 가계대출을 둘러싼 은행과 비은행권 금융회사간의 경쟁 심화

- 신용카드 전업사를 비롯한 여신전문회사와 은행간의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등 소액의 단기가계자금 대출 부문에서의 경쟁 가속화
- 은행과 비은행 저축기관간의 가계관련 수신 및 여신 부문에서 과열경쟁
- 은행과 보험사간의 연금상품과 가계대출 부문에서의 경쟁 심화
- 증권 및 투신권과 은행간은 신탁상품 및 수익증권 프라이빗 बैं킹 부문에서 경쟁 심화

4. 정부의 카드사용 장려정책과 소액신용대출 관련 규제 완화

○ 카드사용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확대 등 신용카드 사용 유인정책과 신용카드 관련 규제를 완화

- 이미 도입되었던 신용카드 사용시 복권추첨제도와 더불어 소득공제 한도를 추가적으로 확대

○ 사금융의 제도권 흡수 및 서민금융기관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지원책

-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감독상의 인센티브 부여
-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100%에서 50%로 완화
- 정부가 최근 들어 신용카드시장의 경쟁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카드사의 신규진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임
 - 유통업체와 외국금융기관들이 국내카드업에 적극 진출하여 영업 확대
 - 카드업계의 선두 2~3개사를 중심으로 치열한 시장점유율 및 당기순이익 경쟁
- 신용평가가 상대적으로 심한 은행 등을 통해 자금을 구하기 힘든 중소기업인들이 할부금융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소액대출을 통해 자금 동원
 -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들의 소액대출의 대부분이 신용대출로 담보력이 없는 서민의 금융수요를 충족
 - 은행에 접근하기 어려운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서민금융기관들이 단기급전대출 수요를 고금리 여신으로 충족
- 카드전업사들의 공격적인 경영방식으로 인해 과당경쟁이 발생하여 신용상태에 대한 철저한 검증없이 마구잡이식 카드발급 초래
 - 카드사들이 수익성 제고를 위해 판매지급보다는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사용 권유

5. 부동산가격 등 자산가격 상승

- 저금리 지속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부담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 가계대출에 대한 기회비용 감소
 - 반면 저금리의 영향으로 가계대출을 이용하여 투자수익률이 높은 부동산투자를 선호
 - 저금리가 전세가격을 상승시키고 이는 다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연쇄작용을 일으킴
- 2001년 은행권 가계대출의 약 50%가 주택구입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었으며 2002년 들어서도 신규 가계대출의 절반 정도가 주택구입용인 것으로 판단(<표 III-8> 참조)

<표 III-8> 가계대출의 용도별 구성비

(단위: %)

용도	주택구입	사업자금	부채상환	교육비/소비	재테크	기타
구성비(%)	48.2	19.2	5.3	17.5	3.1	6.6

자료: 국민은행경제연구소/TNS('02.5)

-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부동산 담보가액을 높이면서 대출가능한도액을 증가시켜 가계대출 잔액이 증가하는 효과
 - 특히 아파트 매매가격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폭등하는 현상 발생(<표 III-9> 참조)

<표 III-9> 아파트 매매가격 추이

(전기말월대비, %)

	2001년	2002년					
	연간	1/4	2/4	3/4	8월	9월	10월 ¹⁾
아파트매매가격	14.5	11.0	2.0	7.4	2.4	3.5	0.3
<서울 및 수도권>	19.2	13.8	2.3	10.3	3.4	4.7	0.4
서울	19.3	15.0	2.3	11.7	3.8	4.9	0.4
(강남)	(22.0)	(17.8)	(2.3)	(13.0)	(4.3)	(5.3)	(0.3)
(강북)	(14.4)	(10.0)	(2.2)	(8.9)	(2.7)	(3.9)	(0.4)
인천	26.3	9.3	3.3	8.3	2.3	4.3	1.2
수원 ²⁾	9.2	3.7	1.9	10.1	4.2	4.1	..
성남 ²⁾	14.0	17.1	-0.3	7.3	3.3	3.4	..

출처: 한국은행

주: 1) 국민은행 「주요 APT가격 선도지역 동향조사」 10.22일 기준(9.24일 대비)

2) 전체주택 기준

자료: 국민은행 「도시주택가격 동향조사」

○ 또한 주택금융 활성화 정책도 추진

- 30년 장기주택대출상품을 허용하고 주택가격 대비 대출한도도 확대

6. 기업들의 투자 자금수요 감소

○ 외환위기 이후 일부 대기업의 무차입 경영선언 등과 함께 경기불확실성 환산으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를 위한 자금수요 감소(<표 III-10> 참조)

- 자금순환표상으로 볼 때 기업들의 자금부족액은 최근 들어 감소 추세를 보여왔음

- 반면, 가계의 자금잉여액도 급격히 줄어들었고 2002년 2/4분기 이후에는 가계는 자금부족 부문으로 전환

<표 III-10> 기업의 자금운용 및 조달 구조

(단위: 조원)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1/4	2/4	3/4
기업부문의자금부족액	29.2	29.0	37.9	24.0	7.6	6.7	4.5
자 금 조 달 액	28.0	53.0	65.8	51.9	23.5	19.3	18.9
간 접 금 용	-15.9	2.2	11.8	1.2	16.4	12.4	9.1
직 접 금 용	49.5	24.8	17.2	36.8	0.8	9.3	9.5
국 외 조 달	-9.5	12.8	16.8	2.3	2.7	1.0	0.1
자 금 운 용 액	-1.2	24.0	27.8	28.0	15.9	12.6	14.4
개인부문의자금잉여액	84.5	42.8	32.5	14.7	1.1	-1.4	-5.2
자 금 조 달 액	-30.2	23.1	36.3	70.5	23.8	25.5	27.0
자 금 운 용 액	54.3	65.9	68.8	85.2	24.9	24.1	21.8

자료: 한국은행, 『자금순환동향』, 각 호

- 상장제조업체의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은 2002년 9월말 현재 130.1%로 2001년말 185.7%에 비해 55.6%p나 하락하는 등 기업 대출수요 감소(<표 III-11> 참조)

- 이와 같이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차입금을 적극 상환한 데 주로 기인³⁾

- 이에 따라 기업(상장 제조업 기준)의 차입금의존도(<차입금+회사채>/총자본)는 2002년 9월말 현재 33.1%로 2001년말의 41.3%에서 8.2%p 하락

3) 2002년 9월말 부채비율의 급격한 하락한 것은 대우자동차의 출자전환 및 채무면제 등 구조조정 이후 대우자동차의 재무구조 개선된 것만으로도 제조업 부채비율이 26.5%p나 하락하는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

<표 III-11> 상장 제조업체 재무구조 관련비율 추이

(단위: %)

	1998말	1999말	2000말	2002.6말	2001말 ¹⁾	2002.9말
부 채 비 율	299.2 (303.0)	199.7 (214.7)	215.3 (210.6)	132.9 (135.6)	185.7 (182.2)	130.1
자기자본비율	25.0 (24.8)	33.4 (31.8)	31.7 (32.2)	42.9 (42.4)	35.0 (35.4)	43.5
차입금의존도	49.4 (50.8)	38.2 (42.8)	38.2 (41.2)	30.2 (33.1)	41.3 (39.8)	33.1

주: 1) 2002년 9월말 기준 분기재무제표 작성대상업체의 실적치

2) ()내는 전체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경영분석 조사결과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호

○ 기업들의 차입금의존도가 감소한 것과 더불어 총 차입금 중 장단기 차입금 비중이 변화(<표 III-12> 참조)

- 특히 기업이 여유자금을 상대적으로 이율이 높은 장기차입금을 갚는 데 사용함에 따라 단기차입금 비중은 늘고 장기차입금 비중은 최근 들어 감소추세

○ 이는 우리나라 장기자금시장의 취약성과 더불어 금융권이 장기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

<표 III-12> 장·단기차입금 구성비 추이

(단위: %)

	1998말	1999말	2000말	2002.6말	2001말 ¹⁾	2002.9말
단기차입금/총차입금	41.9 (46.6)	38.0 (46.0)	50.1 (53.1)	38.6 (47.8)	35.7 (42.4)	41.6
장기차입금/총차입금	58.1 (53.4)	62.0 (54.0)	49.9 (46.9)	61.4 (52.2)	64.3 (57.6)	58.4

주: 1) 2002년 9월말 기준 분기재무제표 작성대상업체의 실적치

2) ()내는 전체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경영분석 조사결과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호

IV. 정부의 정책대응과 금융권 부실화 가능성

1. 가계대출급증 억제정책

- 가계대출과 관련 정부가 추진한 대책은 금융회사에 대해 건전성관련 감독을 강화하고 가계대출 이용자에 대한 보호와 홍보차원으로 크게 다섯 가지임

1) 가계대출의 신용리스크관리 강화

- 금감원은 가계대출 문제가 부상하자 금융권별로 가계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태를 종합 점검하였음
 - 특히 그동안 분기별로 작성해오던 가계대출 및 연체율 자료를 월별로 작성하는 등 가계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음
- 감독차원에서 금융권에 대해 가계대출에 대한 신용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음
 - 2002년 하반기부터 각 은행별 가계대출 부실예방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유도하고 있음
 - 2002년 3월부터 인터넷 가계대출의 신용리스크관리 강화 및 거래안정성의 제고를 유도
 - 2002년 5월부터는 가계대출 확대 은행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배정액을 축소
- 가계대출 급증현상이 외환위기 이후 일어난 전례 없는 현상임에 따

라 감독당국이 실태에 대한 파악과 모니터링을 강화한 것은 적절한 조치임

- 가계대출에 대해 신용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금융회사들의 업무이며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강화하는가 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의 경쟁력과 직결될 것임
- 따라서 감독당국이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감독상의 유인책을 주는 것은 타당하나 지나친 간섭은 자제해야 할 것임

2)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상향조정

- 은행 및 신용카드사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수 차례에 걸쳐 추가로 상향조정(<표 IV-1> 참조)
 - 지난 2/4분기에 이어 은행 및 신용카드사에 대한 대손충당금 최저 적립률을 추가로 상향조정
 - 보험사 및 할부금융사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조정

<표 IV-1> 금융회사별 대손충당금에 대한 최저 적립률 변화

(단위: %)

	정상	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은행	0.5 → 0.75	2→5→8	20	50 → 55	100
신용카드(은행포함)	0.5 → 1.0	4.5→7→12	20	60	100
보험사	0.5 → 0.75	2 → 5	20	50	100
할부금융사	0.5 → 1	1 → 2	50	75	100

자료: 금융감독위원회, 보도자료

- 3/4분기 결산부터는 은행권에 대해 신용카드 미사용약정에 대한 1%의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함
-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상향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립 부분을 손비로 인정하여 금융회사의 수지부담을 줄여주는 조치 병행

3)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건전성감독 강화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강화

- 2002년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도 일반신용대출과 같이 상환능력 등을 감안한 개인신용평가 의무화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차등적용

- 차주의 연체상황 및 채무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BIS 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치를 상향조정
- 2002년 11월부터 신규대출에 한하여 아래의 2가지 요건중 1가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 위험가중치 60%를 적용하고 2가지 요건 모두에 해당할 경우 70%를 적용
 - 요건 1(연체조건): 주택담보대출금이 현재 30일 이상 연체이거나 과거 1년간 누적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 요건 2(채무상환능력요건):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부채비율(= 차주대출금총액/차주연소득)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 및 차주의 소득증빙 미제출로 부채비율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 주택담보비율 초과에 대한 건전성감독 강화

-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금중 주택담보비율(LTV: Loan to Value) 60% 초과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3/4분기 결산부터 상향조정

- 정상: 0.75 → 1%, 요주의: 5 → 10%

- 3/4분기 결산부터 3개월 이상 연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비율이 60%를 초과시 “고정”으로 분류

○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 60% 하향조정조치 전국 확대

- 2002년 9월 9일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였던 투기과열지구의 신규취득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하향조정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비율을 현행 70~80%에서 60% 이내로 운용하도록 지도

○ 6월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분보증제도 도입(100%→90%)

4) 신용카드부문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 신용카드의 남발 및 남용에 대한 억제대책

- 2002년 3월부터 신용카드에 대한 가두모집을 금지하고 모집인 등록제를 도입

- 2001년 12월부터 카드발급시 본인 및 소득여부 등의 확인을 의무

화하고 미성년자 카드발급에 대한 부모사전동의를 의무화

- 신용카드이용한도에 대해 회원이 신청한 범위내에서 카드사가 결제능력을 고려하여 이용한도를 부여하도록 규제

○ 현금대출 위주의 영업행태 억제정책

- 신용카드회사의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비중을 2004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전체 채권액의 50% 이내로 제한

○ 카드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제도의 적용 및 기준 강화

- 그동안 카드사는 수신기능이 없고 규모가 작아서 적기시정조치가 적용되지 않았으며 감독수준도 은행에 비해 높지 않았으나 최근 은행에 준하는 조치를 적용하기 시작

- 최근 들어서는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은행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2003년 4월부터 시행하려고 시도중(<표 IV-2> 참조)

- 적기시정조치의 주요기준인 조정자기자본비율 기준과 경영실태 평가등급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상향조정
- 연체율과 손익상황을 적기시정조치기준으로 새로 도입
- 적기시정조치 결과 '경영개선요구' 수준을 받게 되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신규회원모집 중지나 자금차입제한 등 강력하게 제재

<표 IV-2> 적기시정조치기준 강화안

구 분		현 행	개 정
경영개선 권고	조정자기자본 비율	7%미만	8%미만
	경영실태평가종합등급	4등급	1~3등급
	자산건전성 혹은 자본적정성	3등급(보통) 이상	4~5등급
경영개선 요구	조정자기자본비율	4%미만	6%미만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4등급	4~5등급
	자산건전성 혹은 자본적정성	4등급 이하	-
	1개월이상 연체채권비율	없음	10%이상
	당기순이익	없음	적자
경영개선 명령	조정자기자본비율	1%미만	2%미만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5등급	5등급
	1개월이상 연체채권비율	없음	10%이상
	당기순이익	없음	적자

○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 카드회사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여 미연체 정상채권의 경우도 대손충당금을 0.5%에 1%로 상향 조정하였음
- 전업카드사에 대해 현금서비스 한도액중 미사용분에 대해서도 1%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하는 것을 시도 중

○ 대환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강화

- 현재 신규대출로 인정하여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대환대출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강화하여 기간경과에 관계없이 “요주의 이하”로 분류하고, 상응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의무화(<표 IV-3 참조)

- 대환대출이 현금서비스 연체자 등을 대상으로 대출로 전환하는 만큼, 사실상 연체채권에 해당하고 연체율도 높으며 이를 대상으로 무조건 요주의로 분류하는 것은 지나친 점이 있음
- 지나치게 규제를 하면 카드사는 대환대출을 다른 대출로 전환하거나 숨길 가능성도 있음

<표 IV-3> 카드회사의 대환대출 및 연체율 현황

(단위: 억원, %, %p)

구 분	2002.8월말	2002.9월말	전분기말 대비 증감(률)
대환대출 합계 (연체비율)	39,253 (28.1)	42,672 (26.5)	3,419(8.7) (-1.6)

주: 경영은행 카드사 포함

5) 가계대출 이용자 보호대책

- 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제도)의 도입
 - 2002년 5월부터 금융회사별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
 - 2002년 10월부터 다중채무자에 대한 개인신용회복 지원제도 도입
-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개인신용회복협약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 부여
- 개인워크아웃 대상 채무자요건을 적극 홍보하는 등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방지

- 신용카드사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비자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비자 재무상담제도 구축

2. 거시경제정책의 문제점

1) 투자여건 개선 없는 저금리 정책

- 투자여건 개선이 미흡한 가운데 저금리 기조 거시경제정책의 한계 노출
 - 내수중심의 경기부양을 위해 저금리기조를 유지하는 거시경제정책을 지속하였으나,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나 투자여건개선의 미흡 등으로 민간소비만을 촉진
 - 풍부한 시중자금이 가계로부터 생산적인 기업으로 흘러가게 하고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 부재
 - 저금리정책의 지속은 투자활성화보다는 소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능가하는 과소비만을 조장
 - 또한 대내외 경제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기업의 자금수요가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
 - 특히, 출자총액제한이나 주5일 근무제 및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등 기업경영활동을 제약하는 제도들이 유지되고 있거나 도입될 예정인 조건에서 기업의 투자활동이 활성화되기 힘든 상황

2) 과잉유동성 흡수노력 부족

○ 과잉 유동성을 적절히 흡수하는 차원의 정책적 노력은 부족

- 2002년 5월 정책목표 콜금리를 4.00%에서 0.25%p 높은 4.25%로 상향조정하였으나, 과잉유동성의 적절한 흡수는 이에 비해 미흡하였음(<표 IV-4> 참조)
- 2002년 3월부터 M3 증가율의 감시범위(8~12%)를 벗어나기 시작하여 최근까지도 M3가 증가세 지속
- 또한, 본원통화, M1 및 M2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듯하였으나 11월에 오히려 상승세를 지속하여 전월(각각 9.7%, 17.5% 및 12.1%)보다 상승한 12.7%, 20.4% 및 12.7%를 각각 기록

<표 IV-4> 2002년 정책금리변화와 통화 및 통화안정증권발행 증가율 추이
(단위: 10억원,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콜목표금리	4.00	4.00	4.00	4.00	4.25	4.25	4.25	4.25	4.25	4.25	4.25
본원통화*	7.1	20.3	17.6	17.0	17.8	16.3	14.9	15.1	15.3	9.7	12.7
M1*	16.3	27.7	24.1	22.7	24.2	23.3	21.0	20.9	19.2	17.5	21.6
M2*	12.6	14.9	16.1	15.7	14.5	13.8	12.3	11.8	12.1	12.1	12.6
M3*	11.6	11.9	12.9	13.7	13.7	13.5	13.0	12.4	12.4	12.5	13.7
통화안정증권#	80366	79091	82471	84216	84459	84818	85101	86009	84679	83374	-
(증가율)	(1.6)	(-1.6)	(4.3)	(2.1)	(0.3)	(0.4)	(0.3)	(1.1)	(-1.5)	(-1.5)	(-)

자료: 한국은행

* : 평잔기준, 전년동월비, %

: 십억원, 말잔기준, 전월비, %

- 5월 정책금리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본원통화, M1, M2 및 M3 등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지 않았음에도,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등을 통해 과잉 유동성을 적절히 흡수하지 않았음
 - 5월의 통화정책은 자금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금리인상 정책을 취하였으나, 5월부터 최근까지 통화안정증권 발행증가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아 시중자금의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는데 미흡
 - 금융기관의 대출경쟁이 격화되어 통화(신용)승수가 큰 상태에서 본원통화의 약 2.5배(10월 본원통화 약 32.7조)인 통화안정증권 발행 잔액은 과잉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
 - 더욱이 9월과 10월에는 통화안정증권 발행 잔액이 감소하여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 결과 11월 각종 통화지표들이 10월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시현
 - 따라서, 과잉 유동성의 적절한 흡수를 위해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했어야 함
- 또한, 최근 M2 증가율 12%대는 과거 M2를 통화정책의 중간목표로 활용하던 시기에 사용하였던 EC방식에 비추어볼 때도 다소 높은 수준임
 - EC방식에 의하면 M2 증가율은 경제성장률(6.1%), 예상 소비자물가상승률(2.7%), M2 유통속도 하락률(외환위기 이전 1990~1997년 평균 2~3%)을 합한 10.8~11.8% 수준임

3) 정책혼선과 시장기대 형성 왜곡

- 잦은 정책담당자의 의견개진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정책이 혼선되

는 듯한 시그널을 시장에 주어 시장 내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는 것을 왜곡하는 효과를 가져옴

- 통화정책운용에 대한 한국은행과 정부의 상충된 의견개진으로 향후 금리인상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시장기대형성이 왜곡되어 가계대출 증가세를 둔화시키지 못함
- 금리인상을 예고하는 한국은행의 의견개진과 정책금리의 현 수준 유지를 주장하는 정부의 의견개진이 상충되어 한국은행이 의도하는 시장기대가 왜곡됨
- 이로써 가계대출 급증세가 지속될 경우 금리인상이 단행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의도가 무력화됨

○ 1997년말 한국은행법의 개정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인플레이션 타계팅은 다른 통화정책 운용체계와 달리 통화정책의 대외적인 측면을 중시하여 정책담당자들이 정책신호를 빈번하게 발송(<표 IV-5> 및 <표 IV-6> 참조)

<표 IV-5> 한국은행의 주요 정책신호 일지(2002년)

일자	신호자	신호내용	신호방향
8. 29	총재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안되면 한국은행도 협조할 것	인상
9. 13	총재	내년물가 예측해봐서 대단히 우려되는 것으로 나오면 돈 걷어들이고 금리를 올릴 것	인상
9. 29	총재	인플레 압력 곧 현실화할 것	인상
10. 11	총재	저금리와 과잉유동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거시적 측면에서는 금리를 조금 올리고 돈도 거둬야 한다는 분명한 방향	인상

자료출처: 연합뉴스

<표 IV-6> 정부의 주요 정책신호 일지

일자	신호자	신호내용	신호방향
9. 5	금감 위원장	거시정책기조는 안정적, 중립적으로 유지하면서 금융 외환시장을 관망할 필요가 있다.	유지
9. 6	재경부 장관	현재 경제상황에서 금리인상정책은 정부의도와 맞 지 않다	유지
9. 9	재경부 장관	현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해도 부동산 투기억제에 큰 효과가 없을 것	유지
9. 12	재경부 장관	현재는 기업대출수요가 없어 금통위가 금리를 올 려도 효과가 없는 데다 미국경기회복이 불확실하 고 이라크전쟁이 예상되는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유지
9. 26	산자부 장관	금리를 올려 거시지표를 움직이면 기업에 불확실 성을 주게 된다.	유지
9. 29	재경부 장관	부동산 시장을 대상으로 한 금리 조정에는 반대 한다	유지
10. 1	재경부 장관	금리조정은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 해야 함	유지

자료출처: 연합뉴스

-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 정부가 평가하거나 언급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정책혼선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므로 통화정책의 신뢰성이나 유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됨
- 반면에, 정부의 통화정책에 대한 의견개진이 일종의 정책공조를 형성하고 시장참여자들의 정보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을 완화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다소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반론도 존재
- 그러나, 정부의 빈번한 정책신호(policy signal) 발송은 통화정책 방향을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한국은행에 대한 독립성 및 신뢰성을 훼손시켰다는 주장이 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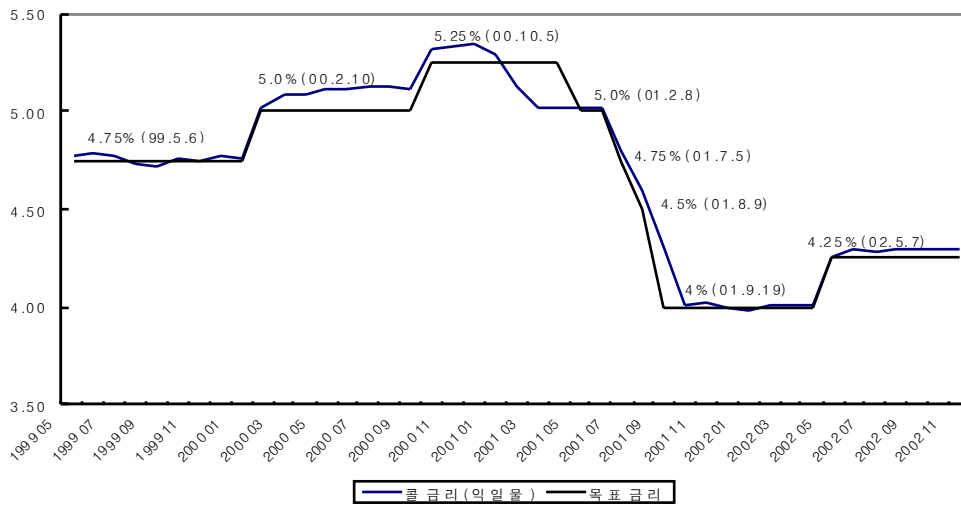
- 더욱이, 한국은행에 의해 발송된 정책신호에서 나타난 통화정책의 방향과는 달리 공식적인 금융통화위원회의 발표가 상이하여, 시장참여자들의 한국은행에 대한 신뢰성 훼손
 - 즉 한국은행의 '정책금리인상'이라는 정책신호와는 달리 금융통화위원회의 공식발표는 '정책금리의 유지'이었음
 - 한국은행에 의한 '금리인상'의 정책신호에도 조만간 금리인상을 단행한다는 시장기대형성에 미흡
- 여기에 2003년에는 정책금리가 인상되리라는 기대형성과 함께, 2003년 연초에 소액금융정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2년 말 가계대출이 오히려 증가

4) 최근 정부의 금리정책 전환

- 콜 금리 인상을 통한 자금 회수의 부담으로 창구를 통한 금리조절을 시도
 -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조치에 따라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하향조정, 가계대출 금리는 상향조정
 - 가계대출은 내수 소비를 진작하는 지렛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현 시점이 금리조정에 나설 때인지 의문
 - 카드빚 상환불능자를 구제하면서 다른 한쪽으론 원리금상환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은 모순임
- 이자율에 실망한 저축률 하락

- 유휴자금의 물꼬를 기업쪽으로 터주려는 노력은, 특히 중소기업들이 처한 여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
- 또한 실질금리의 하락으로 인해 민간부문의 저축률 하락 지속

<그림 IV-1> 정책목표금리 및 콜금리 추이



3. 가계대출정책의 문제점

1) 은행권의 여유자금 운용의 어려움

○ 2000년 8월 대우사태 이후 안전성을 선호하는 자금이 은행권으로 이동함에 따라 자금이 넘쳐나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의 여유자금 운용처가 없음(<표 IV-7> 참조)

- 은행권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자산운용 중 원화대출의 비중은 늘었으나 대부분이 가계대출로 인한 것임

- 유가증권 운용의 경우는 대부분이 국채, 예보채 등의 정부채임

<표 IV-7> 예금은행의 자산별 비중 추이(말잔기준)

(단위: %, 조원)

	1990	92	95	96	97.9	97.12	98	99	2000	01	02.9	잔액(조원)
원화대출	46.7	48.7	46.2	45.0	47.5	39.8	37.7	41.3	44.1	46.9	51.9	441.2
기업대출	32.7	31.3	33.5	27.0	26.0	27.3	26.9	25.5	26.1	222.0
대기업	7.3	7.1	8.7	6.8	6.7	6.0	5.7	3.9	3.5	29.9
중소기업	25.4	24.2	24.8	20.3	19.3	21.3	21.2	21.6	22.6	192.2
가계대출	12.6	12.7	13.1	11.6	10.4	13.1	15.5	20.7	24.7	210.2
외화대출	5.2	4.9	5.2	5.7	5.8	7.5	5.5	3.0	2.0	1.0	1.4	11.9
유가증권	9.6	10.7	14.4	15.0	16.3	16.3	25.9	27.1	26.1	26.9	23.8	202.1
기 타	38.5	35.7	34.2	34.3	30.4	36.4	30.9	28.6	27.8	25.2	22.9	195.0
자산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50.2
자산잔액 ¹⁾	(158.4)	(211.2)	(330.2)	(394.0)	(410.2)	(503.9)	(531.8)	(606.1)	(704.2)	(762.6)	(850.2)	—

주: 1) 지급보증대충 제외

자료: 한국은행, '예금은행의 자금 조달 및 운용 행태 변화', 2002.12.25

○ 국내외적 경제시스템의 불확실성이 완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직접금융시장인 주식과 채권시장의 침체도 지속되고 있음

- 결국 300조원을 상회하는 시중부동자금이 금융권내에서만 맴도는 현상이 몇 년째 지속

○ 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대책이 없는 한 은행대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가계대출 억제시 금융권의 여유자금은 갈 곳이 없음

- 금융권의 여유자금에 대한 운용처를 마련하지 않고 가계대출만 줄이면 금융시장의 왜곡은 물론 거시경제에도 부작용이 올 것임 (다음장에서 논의)

2) 가계대출 억제정책의 부작용

○ 가계대출을 무조건 억제하게 되면 서민들의 제도권 금융사 이용을

어렵게 해 서민들 사채시장으로 내몰게 됨

-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은 보험사나 캐피탈,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며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이 불가능한 서민들은 사채시장으로 가게 됨
- 제도권시장에서 멀어질수록 대출금리는 급상승하며 이는 곧 상환 부담을 급격히 가중시키게 됨
- 최근에는 저축은행 같은 곳에서도 대출 리스크를 고려해 급전 소액대출상품을 포기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무허가 대금업체로 가고 있음

○ 시장의 자율기능을 지나치게 제한

- 카드사들의 무이자할부 서비스, 각종 할인혜택 등 신용카드사의 소위 부당 영업행위를 업계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것도 시장의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지나친 시장간섭임
- 카드사들의 이러한 경쟁행위는 카드시장에서 이자율로는 경쟁이 되지 않으므로 나타난 카드사간 비가격 경쟁이라고 볼 수 있음

○ 여전히 관치금융을 생각나게 하는 수준의 정책에 의존하는 경향

- 가계대출 관련 각종 조치는 정부의 강권수준의 정책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관치금융 심화로 과연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

○ 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한 책임을 시장원리에 의해 카드사 자산이 지도록 해야 함

- 이를 억제하는 것은 정부가 보호하려는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취약한 카드사들의 자연스러운 퇴출을 정부가 앞장서 막아서는 행위임
 - 시장기능에 의한 기업상시퇴출제도라는 정부의 원칙과도 괴리
 - 시장기능에 의한 퇴출이란 연체율이 높은 카드사가 차입이나 채권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려 하면 시장에서의 자본조달비용이 너무 높거나 불가능해 카드사 스스로 영업을 축소하는 것이 시장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는 것
- 2002년 7월 카드사의 현금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업무비중을 50% 이하로 축소한 이후 현금대출업무비중은 줄고 있으나 현금대출 절대액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임
- 카드사들은 수익성이 높은 현금대출을 줄이기보다는 무이자 할부 등으로 대금결제액을 늘이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해 나가고 있음.
 - 이에 따라 현금대출비중은 2002년 6월말 60.4%에서 동규제 실시 이후 2002년 9월말 현재 59.0%로 1.4% 줄었으나 현금대출 절대액은 동기간 중 6.7%나 증가(<표 IV-8> 참조)

<표 IV-8> 카드회사의 현금대출 업무비중 및 금액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02년 2/4	2002년 3/4	증 감
현금대출	289,880	309,239	19,359 (6.7)
대금결제	190,090	215,181	25,091 (13.2)
현금대출비중	60.4	59.0	- 1.4

자료: 금융감독위원회, 「가계대출 및 연체율 급증에 따른 신용카드회사 건전성 감독 강화대책」, 2002.11

- 카드사들의 특정업무를 일정한 비율 이하로 줄이라고 하는 것은 관치금융의 대표적 횡포이며 비율은 줄일지라도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오게 됨
 - 카드사들의 영업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단기신용을 제공하는 것이며 굳이 물품구입신용과 현금대출로 구분해 후자를 일정비율 이하로 줄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정부가 개입해 간섭하는 것
 - 현금대출비중을 줄일 경우 이 시장에서 방출된 소비자들은 고금리의 대금업 등 사채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임
 - 현금대출을 억제하면 현재의 수익성 감소현상이 심화돼 오히려 카드사들의 부실화를 촉진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3) 부적절한 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 신용카드사에 대한 건전성 강화 감독방향이 지나쳐서 카드사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
 - 그 예 중 하나가 신용카드사에 대해서 현금서비스 한도액 중 미사용분에 대해서 1%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이는 시장원리를 역행하는 것임
 - 대손충당금은 대출금에 대한 잠재적 대손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쌓아두는 것임
- 이자제한상한법과 대부업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미등록업체가 많아 대부분 100~200%의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급전을 구할 수 있음

- 고금리는 결국 이자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게 해 결국 개인 파산에 이르게 됨

4) 신용관리에 대한 사회적 적응체제 부족

- 우리나라는 단기간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사회적 적응체제가 부족한 상황
 -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이 아직 미비하며 여신전문금융사의 무분별한 카드발급과 대출관행도 여전
 - 신용사회가 정착되지 못한 관계로 개인들의 신용불량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자각이 부족

5) 가계부채의 만기구조 취약

-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문제점은 만기구조도 매우 취약하다는 점임
 - 선진국은 가계부채 중 10년 이상 장기 부채가 60~70%인데 반해, 우리는 3년 미만 중·단기 부채가 80% 이상임
 - 가계대출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파트 담보대출이 대부분 3년 만기로 대출금 만기상환시 부채상환 능력이 떨어지면 아파트매물이 일거에 나와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주게됨
 - 가계대출시장 자체적으로 단기 유동성위험에 빠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직시하지 않고는 가계부채의 해결도 어려움

4. 금융권 부실화 가능성

- 현재의 가계대출 급증세와 더불어 절대적 수준이 위험수위에 있으며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임
 - 문제는 가계대출로 인한 부실채권의 증가로 금융기관이 부실화되고 이것이 금융위기로 이어질 것인가 하는 점임
 - 외환위기가 외채에 의한 위기였다면 가계대출 문제는 내채에 의한 위기로 심할 경우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과연 어느 정도를 가계대출이 금융회사의 부실화를 가져와 위기 상황으로 확산되어 시스템 위기문제로 되는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들 수 있음
 - Dziobek와 Pazarbasioglu(1997)은 적어도 한 국가의 총 은행예금의 20% 이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정의⁴⁾
- 은행, 비은행권, 보험, 투신 및 증권사를 통털어 금융권의 부실여신 비율은 매우 건전한 상황은 아니어도 위기로까지 갈 수 있는 수치는 아님
 - 금융권의 총여신은 2002년 6월말 현재 772.8조원이며 이중 고정이하의 여신은 32.1조원으로 총여신 대비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4.2%임(<표 IV-9> 참조)

4) Dziobek, C., and Pazarbasioglu, "Lessons from Systematic Bank Restructuring: A Survey of 24 Countries," IMF Working Paper WP/97/161, Dec. 1997.

<표 IV-9> 금융회사¹⁾의 여신건전성 현황

(단위: 조원, %, %p)

	1999.12말	2000.3말	2000.12말	2001.12말	2002.3말	2002.6말
고정이하여신 (A)	88.0	90.4	64.6	35.1	38.0	32.1
총 여 신 (B)	590.9	592.6	621.4	644.4	744.1	772.8
고정이하여신비율(A/B)	14.9	15.3	10.4	5.4	5.1	4.2
순고정이하여신 (C)	49.6	49.0	31.6	15.3	15.4	13.1
비율 ²⁾ (C/B)	9.0	8.9	5.4	2.5	2.2	1.8
무수익여신 (D)	66.7	64.1	50.2	31.3	34.1	29.1
비율 (D/B)	11.3	10.8	8.1	4.9	4.6	3.8

자료: 금융감독위원회

주: 1) 은행(특수은행 포함), 비은행(상호저축은행, 증권, 신탁, 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금융), 보험(생보, 손보), 증권·투신사 기준임

2) (고정이하여신-대손충당금)/(총여신-대손충당금), 이하 같음

- 대손충당금을 제외한 순고정이하여신은 13.1조원이며 총여신대비 순고정이하 여신비율은 1.8%임
- 금융회사의 여신건전성이 최악의 상황이었던 2000년 3월말과 비교하여 볼 때 고정이하여신은 2002년6월말 현재는 당시의 35.5% 수준으로 축소되었음

1) 은행권

○ 금융권 전체로 보아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권이 가장 건전한 모습

- 은행권의 2002년 6월말 현재 총여신은 603.2조원 중 고정이하는 14.2조원으로 총여신대비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2.4%임(<표 IV-10> 참조)

- 특히 대손충담금을 제외한 순고정이하여신은 7.3조원이며 총여신 대비 순고정이하 여신비율은 1.2%임
- 은행권의 여신건전성은 최악의 상황이었던 2000년 3월말과 비교하여 볼 때 고정이하여신은 2002년 6월말 현재는 당시의 22.2%수준으로 축소

<표 IV-10> 은행권의 여신건전성 현황

(단위: 조원, %, %p)

	2000.3말	2000.12말	2001.12말	2002.3말	2002.6말
고정이하여신 (A)	64.1	42.1	18.8	18.1	14.2
총 여 신 (B)	485.4	526.1	551.2	580.9	603.2
고정이하여신비율(A/B)	13.2	8.0	3.4	3.1	2.4
순고정이하여신 (C)	35.8	20.7	9.6	8.7	7.3
비율 ²⁾ (C/B)	7.8	4.1	1.8	1.5	1.2
무수익여신 (D)	37.8	29.5	15.5	14.8	11.5
비율 (D/B)	7.8	5.6	2.8	2.5	1.9

2) 비은행권

- 비은행권(상호저축은행, 종금, 신탁, 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금융)의 부실여신비율은 아직 높은 수준(<표 IV-11> 참조)
 - 2002년 3월 이후 2002년 6월 현재 총여신이 114.6%나 증가하였음 (은행권은 동기간 중 24.3% 증가)
 - 비은행권의 고정이하여신은 11.8조원이며 총여신대비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10.4%로 아직 매우 높은 수준임
 - 고정이하여신비율도 2003년 3월 이후 29.8% 감소하는데 그쳤음

<표 IV-11> 비은행권의 여신건전성 현황

(단위: 조원, %, %p)

	2000.3말	2000.12말	2001.12말	2002.3말	2002.6말
고정이하여신 (A)	16.8	14.7	9.2	13.0	11.8
총 여 신 (B)	52.8	43.2	39.1	105.1	113.3
고정이하여신비율(A/B)	31.8	34.0	23.5	12.4	10.4
순고정이하여신 (C)	10.2	8.0	3.0	4.3	3.7
비율 (C/B)	22.1	21.9	9.1	4.6	3.6

3) 가계대출 금융회사

○ 가계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상호저축은행, 신협, 카드사의 부실여신 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표 IV-12> 참조)

- 2002년 6월 현재 신협과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총여신대비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각각 11.9%, 15.4%로 아직 매우 높은 수준임

- 순고정이하여신비율도 신협과 상호저축은행이 각각 5.0%, 8.9%나 되고 있음

<표 IV-12> 서민금융회사의 여신건전성 현황

(단위: 조원, %, %p)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2000.3말	2002.6말	2000.3말	2002.6말
고정이하여신 (A)	2.5	1.3	6.0	2.6
총 여 신 (B)	10.1	10.9	17.4	17.0
고정이하여신비율(A/B)	24.8	11.9	34.5	15.3
순고정이하여신 (C)	2.2	0.5	4.7	1.4
비율 (C/B)	22.4	5.0	29.2	8.9

○ 할부금융회사와 신기술 금융회사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여 2002년6월말 현재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각각 18.4%, 33.3%임 (<표 IV-13> 참조)

- 그러나 총당금을 뺀 순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각각 3.6%와 0.0%를 기록

<표 IV-13> 기타 비은행기관의 여신건전성 현황

(단위: 조원, %, %p)

구 분	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신기술금융회사	
	2002.3말	2002.6말	2002.3말	2002.6말	2002.3말	2002.6말
고정이하여신 (A)	0.5	0.6	3.7	3.7	0.1	0.1
총 여 신 (B)	47.4	55.1	18.0	20.1	0.7	0.3
고정이하여신비율(A/B)	1.1	1.1	20.6	18.4	14.3	33.3
순고정이하여신(C)	0.1	0.1	0.6	0.6	0.0	0.0
비율 (C/B)	0.2	0.2	4.1	3.6	0.0	0.0

4) 카드회사 부실

○ 카드사의 경우는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2002년 6월말 현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나, 가계대출 억제정책이 시행된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 최근 금감원의 집계에 의하면 2002년 11월말 전업카드사와 은행겸영 카드사의 연체금액은 9조630억원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 전업사의 연체금액은 5조6,630억원은 전월대비 증가세가 9.1%로 여전히 높은 반면 은행겸영사의 연체금액은 3조4,000억원으로 전월대비 6.3% 증가에 그침

○ 문제는 앞서 우려했던 바와 같이 이러한 연체액이 부실로 이어져서 카드사의 부실을 가져올 것이며 카드사의 부실은 카드채를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인가 하는 점임

- 최근 들어 카드사간의 경쟁심화와 현금대출 비중 축소 등으로 마진이 잠식되고 있지만 카드사의 경영상황은 카드사별로 커다란 차이가 있음(<표 IV-14> 참조)
- 일부 카드사는 3/4분기 이후 적자로 전환되고 경영에 어려움이 있으나 우수사들은 금리의 하향 안정세와 풍부한 유동성이 지속된다면 조달 코스트가 낮아 큰 문제가 없을 것임
- 따라서 대환론을 포함한 연체채권이 적어도 회계상으로는 대규모 적자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음
- 일부사는 회계상으로도 기존의 자기자본을 잠식하는 상황에 도달할 가능성은 있음

<표 IV-14> 신용카드회사 현황

(단위: 억원, %, 천매)

구분	비씨	국민	엘지	삼성	외환	현대	동양	우리	신한	계
총 자산	7,275	148,617	194,673	197,293	56,246	24,283	9,635	51,057	20,780	709,858
자기 자본	1,624	14,827	21,255	18,250	6,086	1,876	646	10,022	2,506	77,093
당기순이익	366	2,942	5,467	5,089	-202	-644	-304	902	37	13,652
카드채권 (말잔)	734	120,315	112,773	160,257	43,114	21,713	3,554	39,680	20,636	522,775
연체비율 (1일 이상)	6.6	10.3	7.8	7.41	162	9.5	120	8.3	11.7	9.2
연체비율 (30일 이상)	4.9	7.3	5.7	5.8	122	6.7	91	5.2	6.4	6.7
총카드 이용실적	1,082,451	765,240	1,167,517	1,107,432	362,872	57,202	14,376	243,294	112,379	4,912,762

자료: 금융감독원, 신용카드회사 건전성 감독 강화대책, 2002년 11월 20일 보도자료
주: 2002년 9월말 현재임

V. 가계대출억제 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

1. 정책 시나리오

- 정부가 가계대출억제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음
 - 첫째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가계대출실태 종합점검, 가계대출에 대한 신용리스크관리 강화,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상향조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건전성감독 강화, 신용카드부문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등과 같은 미시적인 정책 수단임
 - 둘째는 콜금리목표 인상을 통해 전반적인 금리수준을 상승시킴으로써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거시적인 정책 수단임
- 정부의 가계대출억제정책으로 가계대출에 변화가 발생했을 때 정책변화가 GDP성장률, 물가, 경상수지 등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효과를 보기 위해 다음의 네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해 보았음

1) 기본 시나리오(Base)의 가정

- 경상GDP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현 수준으로 유지되는 경우
- 미시적 정책수단을 통한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정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최근(2001년~2002년 3/4분기)의 전분기대비 약 6~7%에서 약 2.5%로 둔화

2) 시나리오1(Sim1)의 가정

- 미시적 가계대출 억제정책 수단과 함께 점진적인 금리인상으로 가계대출 규모가 현 수준(2002년 3/4분기 현재 약 424조원)으로 억제
- 이 경우 가계대출증가세는 전분기대비 0.0%, 금리(회사채수익률기준)는 2003년 평균금리가 2002년 대비 약 1.0%p 상승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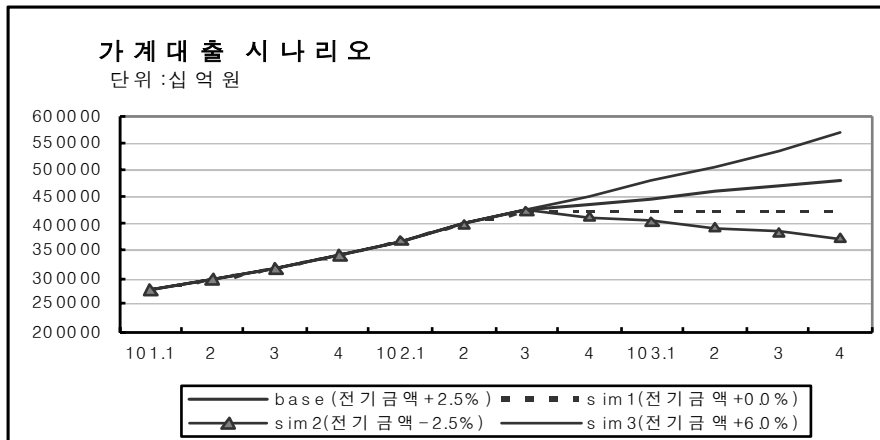
3) 시나리오2(Sim2)의 가정

- 보다 강력한 정책대응으로 가계대출의 절대금액이 전분기대비 약 2.5%감소하고 금리(회사채수익률기준)는 2003년 평균금리가 2002년 대비 약 2.0%p 상승 가정
- 이 경우 2003년말 가계대출규모가 2002년말 대비 약 10% 감소(실제로 1998년의 가계대출은 전년말대비 약 13% 감소했음)

4) 시나리오3(Sim3)의 가정

- 정부의 정책대응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증가세가 최근(2001년~2002년 3/4분기)의 전분기대비 약 6%를 지속하는 경우
- 이 경우 명목GDP 대비 가계대출비중은 약 90%로 미국 등 선진국 수준(70~80%)을 크게 상회

<그림 V-1> 가계대출 시나리오



2. 정책 시나리오별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 앞 절에서 열거한 시나리오에 대한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 가계대출 축소는 대체적으로 민간소비를 위축시켜 성장률과 소비자물가를 떨어뜨리고 경상수지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남(<표 V-1> 참조)

- 첫번째 시나리오의 경우, 기본 시나리오와 비교할 때 GDP는 약 0.8%p, 소비자물가는 0.2%p 떨어지고 경상수지는 약 17억 달러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 두 번째 시나리오의 경우, 기본 시나리오에 비해 GDP는 약 2%p, 소비자물가는 0.4%p 떨어지고 경상수지는 약 40억 달러 개선됨으로써 거시경제적 충격이 더욱 크게 나타남
- 기본 시나리오에 비해 가계대출이 증가한 시나리오 3의 경우에는 성장률과 소비자물가를 높이고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표 V-1> 가계대출규모 변화의 거시경제적 효과

항목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base	S1	S2	S3
가계부채(전년말비,%)	16.5	24.7	28.0	27.4	10.4	0.0	-9.6	26.2
회사채금리(%)	8.9	9.3	7.0	6.6	6.9	7.0	8.6	6.8
GDP증가율(전년비,%)	10.9	9.3	3.0	6.1	5.8	5.0	3.9	6.9
민간소비증가율	11.0	7.9	4.2	6.9	5.2	3.5	1.2	7.6
고정자본형성증가율	3.7	11.4	-1.7	3.7	4.8	4.5	3.6	5.3
소비자물가(전년비,%)	0.8	2.3	4.1	2.7	3.2	3.0	2.8	3.4
경상수지(억달러)	244.8	168.7	133.9	60.1	10.7	27.3	51.8	-12.2

주: 2002년은 추정치

3. 정책적 시사점

- 거시경제정책으로 정책금리를 인상시키고 가계대출규모를 현 수준 또는 그 이하로 억제하면, 물가는 안정되고 경상수지도 개선되나 경제성장세를 둔화시킬 우려가 있음
 - 정책금리인상의 폭과 속도 그리고 가계대출규모 축소 수준에 따라 물가안정, 국제수지개선, 성장률둔화의 정도가 결정
 - 현재 대내외 경기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고 물가상승요인이 크지 않으며 경기회복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물가안정 및 경상수지개선을 위해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거시경제정책은 다소 시기상조로 판단됨
 - 그러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금과 같이 지속될 경우, 민간소비를 촉진시켜 경제성장률을 높이거나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키고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므로 적절한 정책대응이 요망됨

- 따라서, 현 가계대출 증가세를 서서히 둔화시켜, 경기회복세를 유지하면서도 가계대출급증에 따른 경제불안요인을 제거하는 정책대응이 요망됨
 - 최근 기업금융이 간접금융에서 직접금융으로 전환되고 금융기관들이 가계금융을 중시하는 선진국형 금융구조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가계대출규모는 높여가되 그 증가속도를 다소 둔화시킬 필요가 있음
 - 가계대출의 적절한 증가속도는 실질경제성장률(5~6%), 소비자물가상승률(3%), 금융시장의 확대 등을 고려한 수준으로 판단됨
 - 이러한 가계대출 증가 수준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고려할 때 소비자물가의 추가적인 상승을 동반하지 않고 경제성장세를 유지하는 방안임
 - 따라서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가계대출을 급하게 억제하는 무리한 정책보다는 경기회복세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가계대출의 급증세를 서서히 둔화시키는 정책이 요망됨

VI. 향후 정책방향 및 정책대응

1. 장기분할식 대출 전환

- 채무자들의 자발적인 대출 상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들이 일시 상환 대출의 만기를 장기 분할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
 - 지나친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는 수준에서 만기나 금리 조정을 현재보다 신중적으로 적용할 필요

2. 시장친화적 감독정책

- 금융당국의 역할은 직접적으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나 연체율 등 경영방침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보다는 BIS(국제결제은행)도 제시하는 바와 같이 금융회사가 자산건전성, 대손충당금 및 적립금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방침, 관행 및 절차를 수립·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쳐야 함
 - 획일적인 기준을 개별 금융회사들에 적용하기보다는 금융권별로 금융회사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며 이러한 차별화 정책이 금융회사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게 됨
 - 예를 들어 파생될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신용위험도를 평가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써 부채비율(총대출액/연간소득 × 100)을 250%로 하는 등의 일방적인 제시는 지양해야 할 것임
- 금융회사의 경영방식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간접적인 조치 등으로 경고를 주고 문제가 되는 금융회사는 과감하게 퇴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

○ 부실관리를 잘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실제 위험여부를 판단하고 전략을 조절하는 것은 개별 금융회사들이 알아서 할 일임
- 따라서 금융당국은 부작용이 많은 직접규제보다는 신용분석을 통해 대출하고 부실관리를 잘 하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의 정책이 필요

○ 카드사간의 건전한 방향의 경쟁 촉진

- 본인의 신용등급과 적용수수료율을 신용카드대금 청구서에 포함하도록 해 카드회원들이 수수료를 비교 가능하도록(2002년 4월부터 시행)

3. 가계대출관련 법규 및 제도 정비

○ 소비자 신용 및 인터넷뱅킹 등에서의 가계대출관련 법규를 재정비

- 할부금융의 대출금리 인상, 가계대출의 연대보증, 신용카드관련 소비자 신용관련 규정 등 법률을 지속적으로 재정비

○ 소비지출과 관련한 할부금융제도 및 금융기관 채무의 분할 상환제도를 정비하여 소득에 맞추어 원리금 상환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

○ 신용불량자의 등록 기준 합리화와 신용불량 등록에 따른 사회적 패널티와 구제제도 합리화

- 무조건적 대량 사면은 도덕적 해이를 확대시켜 신용사회 정착을
요원하게 할 것임
- 개인별로 채무 상환정도에 따른 사면제도의 일정한 기준 마련
- 단기악성 채무는 금리가 낮고 상환기간이 긴 일반 가계대출로 전
환하는 대환대출제도를 활성화

4. 가계부문의 교육 및 홍보 강화

- 그동안의 정부 정책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정책위주였으나 향후
에는 가계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해야
- 가계대출관련 소비자 상담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성화
 - 소수 고액상담자의 서비스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비자 채무
상담을 일반 서민에게까지 활성화시키는 방안 강구
 - 부채관리전략이나 개인자산이나 현금흐름 관리 등에 대한 소비자
채무교육
 - 가계대출관련 거래약관, 신용카드 사용법, 인터넷뱅킹 사용 등 가
계대출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경로 확산
- 신용불량자 등록에 따르는 사회적 패널티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교
육 홍보 강화
 - 특히 미성년자에 대해 신용불량에 대한 사회적 교육 강화

5. 자본시장의 대기성 자금을 주택금융시장으로 유도

- 주택관련 대출을 단기성 가계대출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주택금융시장의 활성화 및 선진화 없이는 가계대출 문제의 해결이 어려움
 - 현재 단기 부동산화된 자금을 주택금융시장으로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 필요

- 선진국형 주택금융시장을 향한 제도적 틀은 마련
 - 1998년 KoMoCo의 설립과 1999년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의 도입

 -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으로 구성된 1차 주택자금대출기관, KoMoCo로 구성되는 2차 주택대출채권유동화기관, 주택자금의 대출시 신용보완기능을 담당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제도적으로는 효율적 주택금융시스템의 기반 조성

- 그러나 이러한 주택금융시스템이 주거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주택금융의 확대에 의한 주택자금의 확대가 서민주택의 공급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 이에 따라 소득대비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주택시장과 주택금융시장이 유기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

- 주택금융시장의 비효율성은 결국 서민주거의 불안정으로 이어져 서민주택 및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등 최근에는 상당한 문제를 야기

- 주택전세가격은 외환위기 이후 두 배 이상 상승하였고 최근에는 저금리시대를 맞이하여 전세일부를 정기에금금리 두 배 수준인 월 1%로 전환하는 전세+월세 형태의 임대료가 확산

○ 효율적인 주택금융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주택구입가격의 20%만 자기자금으로 충당하고 80%를 대출 받아 20~30%년의 장기에 걸쳐 분할상환 하는 모기지제도 정착 필요
- 임대가구의 상당수를 자가소유로 전환하고 주거안정을 촉진해야 함.
- 주택금융이 실제로 필요한 무주택도시근로자에게 확산되도록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을 공공임대주택에 집중해야 함.
- KoMoCo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하여 MBS의 발행을 확대시킴으로써 자본시장의 대기성 투자자금을 주택금융시장으로 유도

6. 거시경제정책의 공조회복 및 과잉유동성 흡수

○ 투자여건 개선을 동반한 현 거시경제정책 기조 유지

- 풍부한 시중자금을 가계로부터 기업으로 유도하고 투자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기업경영환경이나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경기회복을 위한 현 거시경제정책기조 유지
 - 출자총액제한이나 주5일 근무제 및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등과 같이 기업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들을 완화하고 제도시행을 연기

○ 과잉 유동성에 대한 적절한 흡수 노력

- 대내외 경제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개선될 때까지 현 정책목표금리를 유지하되, 과잉유동성의 적절한 흡수에 노력
 - 이를 위해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

○ 한국은행과 정부간의 정책공조 회복 및 의도하는 시장기대 형성

- 통화정책운용에 대한 한국은행과 정부간의 정책공조를 회복하여 한국은행이 의도하는 시장참여자들의 시장기대형성에 노력
 - 한국은행도 발송된 정책신호에서 나타난 통화정책의 방향과 동일한 공식적인 금융통화위원회의 발표를 통해 시장참여자들의 한국은행에 대한 신뢰성 회복 노력

7. 금융시장 환경 개선

○ 금융기관에 대해 다양한 자산운용이 가능하도록 환경개선에 역점

○ 위험분산을 위한 자산유동화 활성화

○ 수익증권 판매 등 금융상품의 개발

○ 채권 시장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시장전체 효율성을 제고

- 달러 들을 중심으로 활성화된 채권 레포시장과 선물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육성

- 딜러의 시장조성기능 제고 및 인터딜러브로커의 육성
- 우리 주식시장이 동북아증시의 중심에 서도록 국내 주식시장환경 개선
 - 유상증자시 심사 강화 및 기업에 대한 공개확대 등 발행제도 개선
 - 기업의 상장 및 등록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기업에게도 국내시장이 매력적인 주식발행시장이 되도록 해야함.
- 단기지향적 직접금융시장에 있어 투자패턴의 장기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 투자에 대한 세제상의 유인수단 부여